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눈으로 바라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평가 및 제안 보고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평가(2021~2024)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제안(2026~2030)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눈으로 바라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평가 및 제안 보고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평가(2021-2024)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제안(2026-2030)

2024.12.02.

발전대안 피다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PIDA)

www.pida.or.kr

목 차

I. 평가 개요	3
1. 평가 배경	3
2. 평가 목적	3
3. 평가 대상 및 범위	4
4. 평가 방법 및 매트릭스	5
5. 평가 한계	7
II.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4년 평가	8
1. 국제개발협력의 가치 지향성	8
1)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가치	
2)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국익	
3) 협력대상국의 성격	
2.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협력대상국 발전의 특성	12
1) 국제개발협력이 성취하고자 하는 협력대상국의 발전	
3. 협력대상국과 협력하는 방식	30
1) ODA 비구속성 비율	
4. 인류 공동의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성찰적 접근	33
1) 국제개발협력의 불평등 해소 노력	
2) 국제개발협력의 기후위기 완화 노력	
3) 협력대상국의 민주주의 발전 지원	
4) 협력대상국의 다원적 발전 지원	
5. ODA 자원 증대 및 배분	55
1) ODA 규모 목표 달성	
2) 양·다자, 유·무상 ODA 비율	
3) 중점협력국 지원 비중	
4) 보건 분야 중점 지원	
5) 그린, 디지털, 공공행정 ODA 확대	
6) 시민사회협력 ODA 예산 비중 확대	
6.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의 민주적 추진	62
1) 정책 형성 파트너	
2) 사업 실행 파트너	
7.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	72
1)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내용 변화	
2) 정권 주기와 종합기본계획 주기 일치의 필요성	
8.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 지지 변화	74
III. 평가 결과 및 제언	78
1. 주요 평가 결과	78
2. 정책 제언	84

1. 평가 배경

- 2021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채택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3차 종합기본계획>)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했음. 이 기간에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큰 변화가 있었음. 첫째, ODA의 양적 규모가 크게 확대됐는데, 2021년 3조 7,543억 원이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규모는 2024년 6조 2,629억 원으로 약 159% 확대되었음 (관계부처합동, 2024). 둘째, <3차 종합기본계획> 2년 차인 2022년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대외 정책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상위 정책으로 설정함. 셋째, 2020년 시작되어 2년 이상 영향을 미쳤던 세계적 보건 위기인 코로나19 팬데믹이 2023년 종료된 가운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등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음.
- 발전대안 피다는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발전의 가치와 성격에 주목하여 2019년 발표한 중기 전략 문서인 <피다 꽃피우기 2019-2025>에서 명시한 “사람이 꽃피는 발전”(총체적, 성찰적, 다원적, 민주적, 자주적, 연대적 발전), 그리고 이에 근거한 “사람이 꽃피는 국제개발협력”(협력국의 총체적, 성찰적, 다원적, 민주적, 자주적 발전을 위한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의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평가 지표를 설정함.
-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구성된 평가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발전대안 피다는 <3차 종합기본계획> 시행 기간인 2021년에서 2024년 현재까지 4년간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최고 의결 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정책 문서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평가함. 본 평가를 통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성격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시도함.

2. 평가 목적

- 발전대안 피다는 <3차 종합기본계획> 4년(2021~2024)의 기간 중에 발간된 문서를 중심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성이나 성과 등 결과보다는 가치 지향성과 성격 등 그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이 가지는 성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분야를 평가함.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의 가치 지향성 (가치와 국익)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의 성격 (총체성, 자주성, 성찰성, 민주성, 다원성)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주요 목표 달성, 정책 결정 과정, 효율적 운용, 국민 지지)

3. 평가 대상 및 범위

- 평가의 범주는 <3차 종합기본계획> 4년간(2021~2024) 발간된 주요 정책 문서로 다음과 같음. 이번 평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들을 평가함. 단, 평가 대상은 <3차 종합기본계획> 및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전략 문서로 한정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중에서 추진 방안, 역량 진단 결과, 활성화 방안, 모니터링 결과와 같은 실행 문서는 제외함.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 (총 18건)>

- (제49-2호)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2024)
- (제48-2호)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2024)
- (제48-1호)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3)
- (제47-2호)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2023)
- (제47-1호)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2023)
- (제46-1호)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3)
- (제44-2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2023)
- (제44-1호)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3)
- (제43-3호) 민간부문 참여 전략 (2022)
- (제43-2호) 다자협력 추진전략('22-'26) (2022)
- (제42-2호)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2022)
- (제42-1호)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2022)
- (제40-2호)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2022)
- (제40-1호)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2)
- (제39-1호)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2021)

- (제38-2호)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2021)
- (제36-1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021)
- (제36-2호)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1)

※ 2022년 제40차 개발협력위원회 의결 문서인 <(제40-4호)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은 전략 문서는 아니지만, 봉사단 관련 내용에서 해당되므로 해당 부분에서만 활용함. 또한 2021년 제 38차 개발협력위원회 의결 문서인 <(제38-3호)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도 관련 부분에서 다룸.

<ODA 통합누리집(ODA Korea)의 ODA 통계>

- 2021년 ODA 사업 43개 시행기관, 129개국, 4,983개 사업 분석 (2024년 6월 10일 기준)
- 2022년 ODA 사업 42개 시행기관, 131개국, 5,418개 사업 분석 (2024년 6월 10일 기준)
- 2023년 ODA 사업 42개 시행기관, 130개국, 4,488개 사업 분석 (2024년 6월 9일 기준)

4. 평가 방법 및 매트릭스

- 본 평가는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부가 발간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방식을 활용함.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문서들을 평가 매트릭스에서 구성한 기준들을 활용하여 분류하였고, 성찰성, 민주성, 다원성 등 일부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내용 분석 방법론'인 '단어 빈도 분석'을 실행함. 구체적으로는 각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단어를 분석 대상 정책 문서에서 빈도를 정리하고 내용을 해석하였음.
- 본 평가의 평가 매트릭스는 아래 표와 같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전대안 피다가 구성한 6대 분야의 10대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한 12개 항목의 27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으로는 가치 지향성 측면에서는 가치와 국익을 기준으로 평가함. 발전의 특성 측면에서는 총체성, 자주성, 성찰성, 민주성, 다원성을 기준으로 하며,¹⁾ 주요 목표 달성을

1) 해당 기준들은 발전대안 피다가 2019년 작성한 중기전략 문서인 <피다 꽃피우기(2019-2025)>에서 제시한 개념인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6가지 요소, 즉 '총체적인 발전, 성찰적인 발전, 다원적 발전, 민주적 발전, 자주적 발전, 연대적 발전'에 바탕을 두고 있음. 총체성은 발전의 총체성에 주목하며, 1986년 UN 발전권 선언에 근거하여 발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을 강조함. 성찰성은 현 시대 인류가 처한 중요한 과제인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다룸. 다원성은 수원국의 발전의 주체에 정부 외에 시민사회도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취약층에 대한 관심도 다룸. 민주성은 개도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측면을 다루고, 자주성은 개도국에 대한 ODA의 비구속성을 강조함. 이상의 6가지 평가 기준은 발전대안 피다의 관점을 반영한 것임.

효과성을 기준으로, 정책 결정 과정은 민주성을, 효율적 운용은 일관성을, 그리고 국민 지지는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함.

[표 1] 평가 매트릭스

분야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가치 지향성	1. 가치와 국익	1-1.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비전, 목표의 내용
		1-2.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어떤 국익을 추구하는가?	• 국익의 명시적 표기 및 내용
		1-3.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어떤 국가와 협력하는가?	• 협력 대상국 구성 • 소득에 따른 협력 대상국 지원
발전의 특성	2. 총체성	2-1.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협력대상국에 어떤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가?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장기적 목표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부문 지원 균형성 •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협력대상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경제 발전의 성격 • 한국 기업 진출 등을 목표로 한 내용 • 한국 봉사단의 목적과 목표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제도
	3. 자주성	3-1.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협력대상국과 어떻게 협력하는가?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비구속성 비율
	4. 성찰성	4-1.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인류 공동의 지구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가?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불평등 해소 노력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기후위기 완화 노력
	5. 민주성	5-1.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협력대상국의 민주적 발전을 지원하는가?	• 협력대상국 민주주의 발전 지원 내용
	6. 다원성	6-1.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협력대상국의 다원적 발전을 지원하는가?	• 협력대상국 시민사회 지원 내용 • 협력대상국 취약층(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등) 고려 내용
주요 목표 달성	7. 효과성	7-1. 한국 ODA 자원 증대 및 배분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자원 증대 목표 달성 여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배 확대) • 유·무상 비율 40:60 • 비구속성 비율 유상 60%, 무상 95% 이상 • 중점협력국 양자 ODA 70% 이상 • 보건 분야 중점 지원 여부 • 그린·디지털·공공행정 ODA 확대 여부 • 시민사회 협력 ODA 예산 비중 확대 여부
정책 결정 과정	8. 민주성	8-1.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제도적 참여
효율적 운용	9. 일관성	9-1. 종합기본계획은 일관성 있게 추진됐는가?	•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내용 변화 • 정권 주기와 종합기본계획 주기 일치 필요성

분야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국민 지지	10. 지속 가능성	10-1. 한국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증대했는가?	• 2011~2024년 국민 인식 조사 ODA 찬성·반대 비율, ODA 규모 유지·확대·축소 의견 비율

- 평가팀은 총 7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평가 총괄 및 분석), 김향지 발전대안 사무국장(보고서 분석 및 작성), 우승훈 발전대안 피다 운영위원(보고서 분석 및 작성), 이정현, 황희아, 심여은, 곽채경 발전대안 피다 정책 펠로우(자료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지원)가 참여함.

5. 평가 한계

- 본 평가는 가치중심성을 평가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활용한 방법론인 텍스트 분석은 분석과 해석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성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음. 그러나 평가자들의 토론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주관성으로 인한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음.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가치 지향성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

발전대안 피다 평가팀은 <3차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를 분석함.

① 2021~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상의 비전과 목표 방향성

-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21년 종합시행계획>과 같이 기술)은 그 비전으로 ‘글로벌 가치 실현에의 기여 및 상생의 번영 추구’를 제시함. 2021년 12월 작성된 <3차 종합기본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실현’이 이후 2022~2024년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의 비전에 영향을 미침. <’22년 종합시행계획>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발간된 마지막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전반적인 기조가 유지됨. 비전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며, 전략 목표는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임. <’23년 종합시행계획>의 비전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며 전략 목표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ODA,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는 ODA,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을 위한 ODA, 파트너십을 고도화하는 ODA’임. <’24년 종합시행계획>의 비전은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며 전략목표는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파트너십 고도화’를 제시함.
- 2021년 비전은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번영 추구’이고, 2022~2024년 3년간의 비전은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으로 차이를 보임. ‘상호 번영’이 ‘상생의 국익’으로 변경된 것은 2021년 발표된 <3차 종합기본계획>이 설정한 비전의 영향임.
- 2022년 발표된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은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여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 지향’을 비전으로 설정해 <3차 종합기본계획>의 비전인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내용의 방향을 제시함. 즉, 국제개발협력 중기 전략 문서인 <3차 종합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가치와 상생의 국익을 추구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가를 강조해 ‘국익’은

제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2022년 이후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비전으로는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 제시되며 국익이 강조됨.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 혼란을 줄 수 있음.

[표 2]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의 비전과 최종 목표

문서명	비전, 최종 목표	전략 목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파트너십 고도화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ODA,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는 ODA,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을 위한 ODA, 파트너십을 고도화하는 ODA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글로벌 가치 실현에의 기여 및 상생의 번영 추구	• 코로나19 대응 전략적 ODA 추진,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와 공조, 주요 정책 기조 성과 도출 및 사업 효과 제고, 개발협력 외연 확대 및 책무성 증진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국정 비전: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여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 지향	•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선진적·전략적 ODA 추진, ODA 선진화 및 혁신 역량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

2)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국익

-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국익 추구는 국제 공여자 사회 및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논쟁적 주제 중 하나임. 본 평가는 <3차 종합기본계획>하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들이 ‘국익’을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규정하고, ODA를 국익 추구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봄.
- <’23년 종합시행계획>은 ‘상생의 국익’을 제시하고, <’24년 종합시행계획>은 ‘상생의 국익’ 외에도, ‘우리의 국익’, ‘국익’ 등의 표현을 담고 있음. 또한 <’23년 종합시행계획>은 대외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를 강조하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상생의 국익 실현’을 제시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정책 문서들은 구체적으로 국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ODA를 통해 국익 실현, 증진,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함.

- 이같이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 외에도 농촌진흥청, 인사혁신처와 문화재청('24년 종합시행계획),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재청('22년 종합시행계획),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21년 종합시행계획) 등 개별 ODA 시행 부처에서 제시한 계획 중에서도 '국익 창출, 국익 제고, 국익 증진' 등의 표현이 발견됨.

[표 3]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에서 제시된 국익 관련 내용

문서명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국익 창출” (p.7)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비전]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p.7) • 대외정책과 정합성 제고 및 전략적 ODA를 통한 상생의 국익 실현 (p.8) • 국익 증진 및 정부 대외정책과 부합하는 농업기술 협력 확대 (p.181) •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제기구 채용을 지원하여 국제현안 해결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제고 (p.187) • 고대 문화 연구 성과 확보 및 연구인력 역량 강화로 국익 증진에 기여 (p.227)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위해 국격에 맞게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 (p.9) • '부산이니셔티브' 통한 국제협력 강화·상생의 국익 실현 (p.22)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대외정책 및 글로벌 가치 등을 바탕으로 ODA 전반에 대한 종합전략 및 세부전략 (지역·분야 등), 국가별 협력전략 등을 수립·추진하여 원조 효과성 및 국익 제고 (p.49) • 우리정부 국정과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국익 제고 (p.128) • 중점 협력국 및 역사적 친연성 있는 국가 중심의 문화유산 ODA 추진, 고대문화 연구 성과 확보 및 연구인력 역량 강화로 국익 증진에 기여 (p.165)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우리정부 국정과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국익 제고 (p.102) • 특히, 정부 ODA 정책에 맞춰 新남방 관련 해양수산 ODA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 조업기반 확대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익창출에 기여 (p.128) • 중점 협력국 및 역사적 친연성 있는 국가 중심의 문화유산 ODA 추진, 고대 문화 연구 성과 확보 및 연구인력 역량 강화로 국익 증진에 기여 (p.145)

3) 협력대상국의 성격

- <3차 종합기본계획> 시기의 중점협력국 수는 총 27개국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최빈국 10개국(37%), 하위중소득국 13개국(48%), 상위중소득국 4개국(15%) 순임. 하위중소득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2021년 제3기 중점협력국에 새롭게 추가된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이 모두 하위중소득국에 해당되기 때문임.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함.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을 비롯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수원국의 ODA 규모가 증가함. <인태전략>은 2026년 선정될 제4기 중점협력국의 구성과 그에 따른 국가협력전략(CPS)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4] <3차 종합기본계획> 중점협력국 비중 (2024년 8월 기준)²⁾

최빈국 10개국 (37%) GNI \$1,135 이하	하위중소득국 13개국 (48%) GNI \$1,136~4,465	상위중소득국가 4개국 (15%) GNI 4,466~13,845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에티오피아,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 가나, 이집트,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2021~2023년 양자간 ODA 지원 금액에서 각 수원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 그룹별로 구분해 보면 최빈국이 3년간 평균 35.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위중소득국가가 34.66%로 근소하게 두 번째이며, 상위중소득국가는 9.25%를 차지함. 연도별 추이를 보면, 최빈개도국의 비율은 2021년 38%에서 2022년에는 36.08%, 2023년에는 32.09%로 지속적으로 낮아짐. 하위중소득국의 비율은 2021년 33.66%에서 2022년 34.89%, 그리고 2023년 35.39%로 지속적으로 높아짐. 상위중소득국의 경우 2021년 9.65%에서 2022년은 9.54%, 2023년 8.58%로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함.

[표 5]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소득별 국가 그룹 지원 ODA 규모 및 비율 (2021~2023)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	2022	2023	계
총 양자 ODA	2,168.10	2,221.01	2,295.99	6,685.11
최빈개도국 규모 및 비중	823.97 (38%)	801.27 (36.08%)	756.92 (32.97%)	2,382.16 (35.63%)
하위중소득국 규모 및 비중	729.79 (33.66%)	774.08 (34.89%)	812.63 (35.39%)	2,317.22 (34.66%)
상위중소득국 규모 및 비중	209.25 (9.65%)	211.89 (9.54%)	196.99 (8.58%)	618.13 (9.25%)
기타저소득 규모 및 비중	1.75 (0.08%)	3.52 (0.16%)	7.63 (0.33%)	12.90 (0.19%)
소득미배분 규모 및 비중	403.34 (18.60%)	429.54 (19.33%)	521.83 (22.73%)	1,354.71 (20.26%)

출처: ODA Korea가 제공하는 2021, 2022, 2023년 사업 목록을 발전대안 피다 평가팀이 정리하여 구성함.

2) 한국의 중점협력국가를 DAC의 수혜국 목록에 따라 분류, DAC은 3년마다 목록을 개정하며 2026년 하반기에 검토 예정임.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oda-eligibility-and-conditions/dac-list-of-oda-recipient-s.html> (검색일: 2024년 10월 31일))

2. 국제개발협력의 추구하는 협력대상국 발전의 특성

1) 국제개발협력의 성취하고자 하는 협력대상국의 발전

① 국제개발협력의 장기적 목표

- 〈3차 종합기본계획〉 시기인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기간 중 작성된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비전과 전략 목표 그리고 중점 과제를 보면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발전상을 파악할 수 있음.³⁾
- 아래의 내용을 보면 〈3차 종합기본계획〉의 국제개발협력의 최고 비전은 주로 ‘글로벌 가치’와 ‘상생의 국익’을 담고 있음. 또한 전략 목표의 내용에는 2021~2022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2023년부터는 ‘인도주의적 가치’,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공존과 상호 번영’ 그리고 ‘파트너십’이 포함됨. 총 12가지로 제시된 중점 과제들을 보면 ‘인도적 지원, 취약국’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내용이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과 같은 일반적 내용이 있음. 또한 ‘감염병, 디지털, 기후변화’와 같이 현재 중요한 이슈들도 포함하고 있음.
- 종합하자면, 〈3차 종합기본계획〉이 협력대상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발전의 모습은 특별한 발전상으로서 제시되기보다는 보건 위기 극복, 인도주의, 경제·사회 발전과 같이 그 당시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3) 2025년 종합시행계획의 내용은 제50차 개발협력위원회에 제시된 요구액 기준이며 확정액은 아님.

[표 6]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목표 (2021~2025)

구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비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글로벌 가치 실현에의 기여 및 상생의 번영 추구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전략 목표	1. 포용적 ODA 2. 상생하는 ODA 3. 혁신적 ODA 4. 함께하는 ODA	1. 중견공여국에서 선진공여국으로 도약 2. 코로나19 대응 전략적 ODA 추진 3.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와 공조 4. 주요 정책 기조 성과 도출 및 사업 효과 제고 5. 개발협력 외연 확대 및 책무성 증진	1. 포용적 ODA 2. 상생하는 ODA 3. 혁신적 ODA 4. 함께하는 ODA 〈전략과제〉 1. 코로나 19위기 극복 2. 기후변화 대응 선도 3. 개발협력 혁신 다각화 4. 파트너십 선진화	1.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ODA 2.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는 ODA 3.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을 위한 ODA 4. 파트너십을 고도화하는 ODA	1.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2.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3.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4. 파트너십 고도화
중점 과제	1.1. 글로벌 보건 위험 대응 강화 1.2. 취약 분야 인도적 지원 확대 1.3. 인간의 삶의 질 향상 2.1.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 2.2. 녹색전환 선도 2.3. 대외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3.1. 수원국 혁신 역량 강화 3.2.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3.3. 개발협력 자원 다양화 4.1.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4.2. 국제 협력 고도화 4.3. 개발협력 외연 확대	1.1. 보건 의료 ODA 역량 집중 1.2. 개도국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1.3. 글로벌 협력 선도 및 상생 발전의 생태계 구축 2.1. 국제사회 SDGs 이행 지원 2.2.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2.3. 취약국/최빈국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3.1.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 정책·전략과 사업 간 연계 3.2. 우리 강점 분야 지원 확대 3.3.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 4.1. 민간협력 강화 및 협력 플랫폼 확장 4.2. ODA 사업 관리 및 운영 방식 개선 4.3. ODA 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공개 및 홍보	1.1. 보건 의료 대응 체계 구축 1.2. 인도주의 실현 강화 1.3. 경제 회복력 증진 2.1.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2.2. 그린뉴딜 글로벌 협력 선도 2.3. 상생 발전의 그린뉴딜 3.1. 디지털 뉴딜 ODA 지원 3.2. 프로그램 혁신 및 자원 다양화 3.3. ODA 효과성 책무성 제고 4.1. 시민사회 등 민관협력 공고화 4.2. 양자·다자 개발협력 고도화 4.3.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	1.1. 인도적 지원 확대 1.2. 취약국 식량 위기 극복 지원 1.3.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2.1.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2.2. 개발협력 자원 규모 확대 다각화 2.3.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3.1. 기후변화 대응 선도 3.2.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 3.3. 대외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4.1. 국제사회 협력 증진 4.2. 민간 부문 파트너십 강화 4.3. 개발협력 외연 확대	1.1. 인도적 지원 확대 1.2. 위기 대응 및 회복 지원 1.3. 취약국,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2.1.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2.2. 개발협력 자원 다각화 2.3. 개발협력 프로그램 다변화 3.1. 기후변화 대응 선도 3.2. 대외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3.3.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 4.1. 국제사회 협력 증진 4.2. 민간 파트너십 강화 4.3. 개발협력 외연 확대

② ODA의 중점 분야

- 〈3차 종합기본계획〉하 2021~2023년 3년간 한국 ODA 지원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로, 3년간 평균 33.9%임. 이어 ‘비배분/비특정’이 28.4%이고,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은 15.1%임. 그 다음은 ‘생산(산업) 부문’으로 8.2%이고, ‘인도적 지원’이 5.8%로 뒤를 이음.
- 개별 분야를 보면 다자기구에 대한 기금, 기여금, 납입금 성격의 자금 공여 및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비용, 예비 및 기획조사 비용을 포함한 ‘비배분/비특정’이 가장 큰 비중인 28.4%임. 나머지 분야들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이 12.9%, ‘운송 및 창고’가 9.1%, ‘교육’이 7.5%, ‘농업, 임업, 어업’이 6.1%, ‘인도적 지원’이 5.8%, ‘일반공공행정 및 시민사회’가 5.2%를 차지함.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동안 정부는 ODA를 배분함에 있어 특정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보건’과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의 ‘운송 및 창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7]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한국 ODA의 지원 분야 (2021~2023) 4)

(단위: 백만 달러, 증여등가액 기준)

연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산업) 부문	다부문	물자 지원 / 일반 프로그램 원조	부채 관련 지원	인도적 지원	원조국의 행정 비용	공여국 내 난민 지원	비배분/비특정	총계
2021 계 (비율)	1,137.31 (39.6%)	343.14 (11.9%)	216.64 (7.5%)	95.32 (3.3%)	0.34 (0.01%)	-	162.70 (5.7%)	104.66 (3.6%)	0.53 (0.02%)	811.86 (28.3%)	2,872.5
	▪ 보건 475.31 ▪ 교육 202.47 ▪ 일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40.39 ▪ 식수 공급 및 위생 184.13 ▪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11.39 ▪ 인구 정책 및 생식 보건 23.62	▪ 운송 및 창고 246.63 ▪ 에너지 72.26 ▪ 통신 15.30 ▪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4.94 ▪ 금융 및 재무 서비스 4.01	▪ 농업, 임업, 어업 159.99 ▪ 공업, 광업, 건설 44.92 ▪ 통상 정책 및 규정 11.73	▪ 기타 다부문 73.97 ▪ 환경 보호 21.35	▪ 물자 원조 및 일반 프로그램 지원 0.34	-	▪ 인도적 지원 162.70	▪ 원조국의 행정 비용 104.66	▪ 공여국 내 난민 지원 0.53	▪ 비배분/비특정 811.86	
2022 계 (비율)	936.58 (33.3%)	461.26 (16.4%)	232.36(8.3%)	121.89 (4.3%)	40.16 (1.4%)	-	161.95 (5.8%)	101.72 (3.6%)	10.8 (0.4%)	742.83 (26.4%)	2,809.55
	▪ 보건 355.93 ▪ 교육 222.03 ▪ 일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40.15 ▪ 식수 공급 및 위생 145.72 ▪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6.68 ▪ 인구 정책 및 생식 보건 26.07	▪ 운송 및 창고 229.62 ▪ 에너지 170.87 ▪ 통신 36.42 ▪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21.01 ▪ 금융 및 재무 서비스 3.34	▪ 농업, 임업, 어업 170.66 ▪ 공업, 광업, 건설 52.44 ▪ 통상 정책 및 규정 9.26	▪ 기타 다부문 86.7 ▪ 환경 보호 35.19	▪ 물자 원조 및 일반 프로그램 지원 40.16	-	▪ 인도적 지원 161.95	▪ 원조국의 행정 비용 101.72	▪ 공여국 내 난민 지원 10.8	▪ 비배분/비특정 742.83	

4) 2021~2023년 한국 ODA 분야별 지원.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tileLayout> (검색일: 2024년 11월 29일)

연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산업) 부문	다부문	물자 지원 / 일반 프로그램 원조	부채 관련 지원	인도적 지원	원조국의 행정 비용	공여국 내 난민 지원	비배분/비특 정	총계
2023 계(비율)	911.76 (29.2%)	522.4 (16.7%)	269.43 (8.6%)	186.01 (5.9%)	0.22 (0.01%)	-	184.24 (5.9%)	106.67 (3.4%)	1.89 (0.06%)	948.49 (30.3%)	3,131.11
	▪ 보건 302.76 ▪ 교육 239.95 ▪ 일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74 ▪ 식수 공급 및 위생 118.01 ▪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53.16 ▪ 인구 정책 및 생식 보건 23.88	▪ 운송 및 창고 325.17 ▪ 에너지 97.87 ▪ 통신 61.15 ▪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35.43 ▪ 금융 및 재무 서비스 2.78	▪ 농업, 임업, 어업 210.46 ▪ 공업, 광업, 건설 51.69 ▪ 통상 정책 및 규정 7.28	▪ 기타 다부문 98.66 ▪ 환경 보호 87.35	▪ 물자 원조 및 일반 프로그램 지원 0.22	-	▪ 인도적 지원 184.24	▪ 원조국의 행정 비용 106.67	▪ 공여국 내 난민 지원 1.89	▪ 비배분/비특정 948.49	
2021~23 계(비율)	2,985.65 (33.9%)	1,326.8 (15.1%)	718.43 (8.2%)	403.22 (4.6%)	40.72 (0.5%)	-	508.89 (5.8%)	313.05 (3.6%)	13.22 (0.2%)	2,503.18 (28.4%)	8,813.16
	▪ 보건 1,134 (12.9%) ▪ 교육 664.45 (7.5%) ▪ 일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454.54 (5.2%) ▪ 식수 공급 및 위생 447.86 (5%) ▪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211.23 (2.4%) ▪ 인구 정책 및 생식 보건 73.57 (0.8%)	▪ 운송 및 창고 801.42 (9.1%) ▪ 에너지 341 (3.9%) ▪ 통신 112.87 (1.3%) ▪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61.38 (0.7%) ▪ 금융 및 재무 서비스 10.13 (0.1%)	▪ 농업, 임업, 어업 541.11 (6.1%) ▪ 공업, 광업, 건설 149.05 (1.7%) ▪ 통상 정책 및 규정 28.27 (0.3%)	▪ 기타 다부문 259.33 (2.9%) ▪ 환경 보호 143.89 (1.6%)	▪ 물자 원조 및 일반 프로그램 지원 40.72 (0.5%)	-	▪ 인도적 지원 508.89 (5.8%)	▪ 원조국의 행정 비용 313.05 (3.5%)	▪ 공여국 내 난민 지원 13.22 (0.2%)	▪ 비배분/비특정 2,503.18 (28.4%)	

- <3차 종합기본계획>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정치 부문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는 항목인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의 비중은 매우 낮음. 3년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2021년 140.39백만 달러, 2022년 140.15백만 달러, 2023년 174백만 달러로, 3년 합계는 454.54백만 달러이며 3년 전체 ODA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임.
- 한국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에 대한 ODA 지원 규모 자체는 작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일부에 편중되어 있음. 2021~2023년 3년간 KOICA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지원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목적으로 48.18%를 집행한 반면,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목적에 0.82%, ‘인권 감시 및 교육’ 목적에 1.47%,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 목적에 0.17%를 지원하는 등 세부 분야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공공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8]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KOICA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 ODA의
OECD DAC CRS 기준 집행 내역 (2021~2023)

(단위: 백만 달러, 증여등가액 기준)

CRS 코드	제목	규모(비율)			
		2021	2022	2023	3년 계
15110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76.76 (54.82%)	63.33 (44.81%)	73.09 (45.37%)	213.18 (48.18%)
15111	공공부문 재정관리	1.5 (1.07%)	5.97 (4.22%)	2.37 (1.47%)	9.84 (2.22%)
15112	분권화 및 지방정부 지원	6.19 (4.42%)	2.08 (1.47%)	0.31 (0.19%)	8.58 (1.94%)
15113	부패방지기구 및 기관	4.66 (3.33%)	3.83 (2.71%)	2.67 (1.66%)	11.16 (2.52%)
15114	국내 자원 조성	3.02 (2.16%)	4.17 (2.95%)	4.34 (2.69%)	11.53 (2.61%)
15123	개도국의 해외 원조행정 (voluntary code)	0	0	0	0
15126	기타 일반 공공 서비스 (voluntary code)	0	0	0	0
15130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4.32 (3.09%)	5.09 (3.6%)	7.18 (4.46%)	16.59 (3.75%)
15131	사법 정책, 계획 및 행정 (voluntary code)	0	0	0	0
15142	거시경제 정책 (voluntary code)	1.58 (1.13%)	1.07 (0.76%)	0.55 (0.34%)	3.2 (0.72%)

CRS 코드	제목	규모(비율)			
		2021	2022	2023	3년 계
15150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1.04 (0.74%)	1.19 (0.84%)	1.39 (0.86%)	3.62 (0.82%)
15151	선거	1.67 (1.19%)	0.26 (0.18%)	0.2 (0.12%)	2.13 (0.48%)
15153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	0.33 (0.24%)	0.31 (0.22%)	0.13 (0.08%)	0.77 (0.17%)
15154	행정부 (voluntary code)	0	0	0	0
15160	인권 감시 및 교육	1.29 (0.92%)	2.38 (1.68%)	2.85 (1.77%)	6.52 (1.47%)
15170	성평등 조직 및 제도	14.21 (10.15%)	16.47 (11.65%)	13.46 (8.35%)	44.14 (9.97%)
15180	여성과 소녀대상 폭력 근절	9.34 (6.67%)	11.83 (8.37%)	12.15 (7.54%)	33.32 (7.53%)
15185	지방정부 행정 (voluntary code)	0	0	0	0
15190	이민이주 원활화	2.09 (1.49%)	4.74 (3.35%)	9.82 (6.1%)	16.68 (3.77%)
15210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2.74 (1.96%)	1.99 (1.41%)	9.03 (5.6%)	13.76 (3.11%)
15220	시민주도 평화 구축, 분쟁 예방	5.75 (4.11%)	5.69 (4.03%)	11.80 (7.32%)	23.24 (5.25%)
15250	지뢰제거	3.53 (2.52%)	10.92 (7.73%)	9.77 (6.06%)	24.25 (5.48%)
합계		140.02 (100%)	141.32 (100%)	161.11 (100%)	442.51 (100%)

③ 경제 개발의 성격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지향하는 경제 개발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먼저 〈3차 종합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개도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제 발전을 위해’, ‘개도국 지역사회의 선순환 사회·경제 구조 창출에 기여’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지만, 한국 ODA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경제 개발·발전의 뚜렷한 목표나 방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24년 종합시행계획〉은 유상원조 분야에서 ‘수원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교통·ICT, 에너지 분야 ▲수원국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 공공행정, 수자원 분야 지원’과 같이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분야만을 제시함. <'23년 종합시행계획>은 '수원국 경제 발전을 촉진', '개도국 경제 성장' 등을 목적으로 경제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 특정한 방향이나 성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됨. <'22년 종합시행계획>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위기 극복'이 내용이 다수 제시됨. <'21년 종합시행계획>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다수 제시함. '보건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지원, 경제·복지 정책 공유를 통한 경제 회복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여파 경감 지원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됨.

- 4년간 발표한 권역 및 분야별 정책 문서는 경제 발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 2023년 발표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은 분쟁·취약 지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지원'을 내세우며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함.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제고 및 여성 경제력 강화 지원'을 명시하며 특정 그룹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경제 발전 목표를 제시함. 2023년 발표된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은 '농업 기반 경제 발전 및 성장'을 제시하며 아프리카 국가의 상황을 반영함.
- 결론적으로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동안 정부는 초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경제 성장을 지원했으며, 시간이 지나며 일반적인 경제 위기 극복,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 계획을 설명함. 아프리카와 농업 분야 전략 문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대상에 적합하게 경제 회복력과 여성 사회·경제적 지위, 여성 경제력 강화 지원(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농업 기반 경제 발전 및 성장(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을 제시함.

[표 9]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 '경제 개발' 관련 내용

문서명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개도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위해 수원국 문화 콘텐츠를 토대로 현지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추진 (p.12) • 개도국 현지 지역사회와 연대 형성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 개도국 지역사회의 순환 사회·경제구조 창출에 기여 (p.16)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수원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교통·ICT, 에너지 분야 ▲수원국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 공공행정, 수자원 분야 지원 (p.14) • (캄보디아 국가정책연구 역량강화) 캄보디아의 융복합 정책지식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및 가속화 등 지원 (p.51) • (KSP) 전략적 경제협력국, 신흥국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사회 발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국 경제발전 지원과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p.57) • (EIIPP) 심화된 중장기 G2G 정책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협력국 경제발전 지원과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p.57) • 개도국의 보건·방역 역량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적 회복력 강화 적극 지원

문서명	내용
	(p.75) - 고용휴직제도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함으로써 개도국 경제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인적 기여 추진 (p.187) (인프라구축) 교통, 도로, 철도, 공항, 도시개발, 건설기술, 물류 등 개도국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수원국의 인적·제도적·기술적 역량강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의 경험 공유 및 국가표준의 글로벌 확산으로 도시화 및 경제발전 기여 (p.201) - 개발도상국에 고용노동분야 정책경험 및 시스템 전수를 통한 수원국의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에 기여, 우호 협력관계 강화 (p.213) -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통한 ODA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ODA' 실현 (p.227)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2개 중점과제 중 중기부 관련 산업·경제 중점과제 ① 디지털경제 전환지원, ② 기후변화(그린 ODA), ③ 경제발전 기반조성 (p.235) (개도국 법제정비지원) 개발도상국의 법제 개선 및 사회 안정 등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 및 이를 토대로 한 경제발전 지원 (p.255) - ASEAN 국가의 국제 형사사법공조 제도 선진화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의 토대인 법치주의 구현 지원 (p.255) -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도국 기술 문제 해결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개도국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촉진 (p.259) - 한국 조세행정 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세원을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국의 재정 수요 충족 및 경제사회 발전기여 (p.279)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원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교통·ICT 및 에너지 분야 중심 지원, 교통·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중심 지원 (p.22) - 우리 기업의 경험·노하우 공유를 통해 개도국 경제성장에 필수 기반이 되는 대규모 랜드마크형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 (p.22) - 개도국의 보건·방역 역량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적 회복력 강화 적극 지원 (p.67) (법제 개선 지원) 개발도상국의 법제 개선 및 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사회 안정,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p.158)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원국의 경제회복 정책 이행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사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 지원 (p.17)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대규모 인프라 수요 대응을 위해 수원국 수요 기반 우리 강점 분야 (도로·항만·공항·신재생에너지 등) 대형사업 추진 (p.18) 수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업기술 및 인프라 지원 추진 (p.18) - 무역체계 개혁, 조세시스템 개선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기반 강화 및 혁신 성장 견인 (p.18) (분야별) 수원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교통·ICT 및 에너지 분야 중심 지원 (p.41) - 수원국의 경제·사회 회복을 증진하는 교육·농림수산 분야 중심 지원 (p.41) (경제회복) 경제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경제회복력 강화 사업 집중 발굴 (p.41) - 수원국 경제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사업 발굴 확대 (p.45) -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국가발전전략 수립

문서명	내용
	및 정책연구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수원국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 (p.49) • (EDCF) 전세계적 경제·보건·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중점협력국 확대를 고려한 지역별 자원배분을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 추진(38개국 대상 200개 사업) (p.51) • (KSP) 전략적 경제협력국, 신흥국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국 경제발전 지원과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p.51)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교육 및 원격교육 역량 강화, 개도국 경제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 등 수원국 교육협력 수요에 선제적 대응 (p.114) • 고용휴직제도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함으로써 개도국 경제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기여 추진 (p.137) • 개발도상국에 고용노동분야 정책경험 및 시스템 전수를 통한 수원국의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에 기여, 우호 협력관계 강화 (p.145) • (디지털정부) UN 전자정부평가 10년 연속 최상위권 유지 중인 한국형 디지털 정부 발전경험·기술을 수원국에 체계적 지원으로 정부혁신·경제발전 도모 (p.153) • 수원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통한 조세수입 증대로 경제발전 및 자립성장 원조 (p.157) • 최빈국, 개도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확산 강화 (p.167) • ODA 중점협력국인 아프리카,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및 지원 (p.168) • 최빈국, 개도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확산 강화 (p.168)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보건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지원, 경제·복지정책 공유를 통한 경제회복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p.13) • 특히 취약계층(난민 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여파 경감 지원 추진 (p.18) • 사업 발굴단계부터 국제기구 및 공여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제교류 효과가 높은 국가사업에 대한 협조용자 추진 (p.24) • (분야별) 개도국 민간부문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교통, ICT 기반 사업 우선 지원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신재생 등), 보건, 교육 등으로 지원 다각화 (p.32) •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연구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수원국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 (p.35) • (KSP) 전략적 경제협력국, 신흥국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국 경제발전 지원과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등 (p.37) • 수원국과의 교육분야 인적교류(장학생 초청 및 교사 파견·교류 등)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이를 통한 경제성장 도모 (p.93) • 고용휴직제도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함으로써 개도국 경제 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기여 추진 (p.117) • 개발도상국에 고용노동분야 정책경험 및 시스템 전수를 통한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 우호협력관계 강화 (p.126) • 수원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통한 조세수입 증대로 경제발전 및 자립성장 원조 (p.134) • ASEAN 국가의 국제 형사사법공조 제도 선진화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의 토대인 법치주의 구현 지원 (p.139)

문서명	내용
	• 최빈국, 개도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확산 강화 (p.149)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 고등 인재·산업 인재 육성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p.11)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 분쟁·취약지역의 사회 인프라 재건, 주민 생계기반 등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정화 및 통합에 기여 (p.8)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통해 인적 역량을 개발할 필요 (p.5)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 '30년까지 농업 ODA 2배 확대를 통해('21 대비)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농업 기반 경제발전 기여 (p.4) • 수원국 발전단계에 맞춰, 긴급한 식량위기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면서, 농업기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맞춤형 목표 설정 (p.5) • 농업과 타 분야 간 연계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산업화 이행, 디지털 농업 도약 등 경제성장을 견인할 토대 마련 (p.6)
민간부문 참여 전략	• (수원국) 공여국의 민간부문 참여로 자국의 경제·사회개발 촉진 (p.6) • 개도국의 민간부문 개발을 통해 자생적 성장 동력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용이 (p.6)

④ 기업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자국 이익 추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ODA를 통한 기업의 해외 진출임. 본 보고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기업의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정리함.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업 진출(수출)을 위해'와 같은 성격의 내용을 담은 것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의 성격을 담은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3차 종합기본계획> 4년(2021~2024년)간 발표된 정책 문서들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ODA를 통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특별히 강조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관세청임.
 - 첫째, '민간 참여형 대규모 사업으로 연계·확장하여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도모' (2023년 환경부), '개도국 세관 대상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23년 종합시행계획),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24년 종합시행계획 중 기획재정부),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큰 협력국·분야 대상으로 對민간 금융지원 시범사업 추진' ('23년 종합시행계획), '국내 농·식품 기업과 연계하여 농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가공설비·기자재 수출도 측면 지원'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진출

과도 적극 연계’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우리 기업의 컨설팅 참여 기회를 창출’ (민간의 개발컨설팅 참여 활성화 방안), ‘융합금융 통한 대형인프라 개발 지원 촉진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우리 기업의 판로·시장 확보에도 기여’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도 측면 지원’(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등과 같음. 또한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 진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발굴 단계에서 가점을 주는 경우도 존재함. ‘(발굴 단계) 유·무상 ODA(EDCF, KOICA 사업)뿐 아니라, 국내기업진출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KSP 사업 선발시 가점 부여’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등이 이러한 내용에 해당함.

- 둘째, ODA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함. 이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은 ‘기업 진출 및 투자·교역 확대 등 협력의 기틀 마련’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우리 기업의 개도국 내 활동 기반 조성 기여’ (민간부문 참여 전략),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확대’ (다자협력 추진 전략) 등과 같음.

[표 10]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ODA 활용 내용

문서명	한국 기업 진출 지원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ODA 기획시 대외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빈곤퇴치 및 개도국 발전과 함께 기업 해외 진출, 일자리 창출 등 성과도출중심의 개발효과(고용 증대, 지속가능발전 등) 제고 (p.14) • 중소득국의 인프라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수원국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 해외진출 환경 조성 (p.17) • (목적)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자원 공급을 직간접으로 확대하여 수원국 중심의 개발 효과(고용 증대, 지속가능발전 등) 제고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p.17) • 기업의 혁신적 기술 및 글로벌 사회공헌활동(CSR)과 ODA를 연계하여 ODA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시너지 창출 (p.20) • ODA 관련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주기적 의견수렴·지원, 국내외 민간재단과 국제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협력방안 모색·지원 (p.20)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민간의 對개도국 민관협력(PP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EDCF 재원을 활용한 유망사업 발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p.21) • 우리 기업의 강점 기후변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 필요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 (p.23) • 재외공관 및 ODA 시행기관(KOICA·EDCF 등) 해외사무소와의 협업 기반을 활용해 ODA 관련 기업 애로사항 지원 강화 (p.30) • EDCF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외화표시 차관 확대, 수원국 과세정보 제공 및 입찰서류 명시 등 (p.30) • (EDCF) 그린·디지털·보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협력국 등을 고려한 지역별 자원배분 (p.57) • (MDB)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아국 영향력 확대 및 우리기업·인력의

문서명	한국 기업 진출 지원 내용
	조달시장 진출 계기로 활용/개도국과의 경제교류증진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p.57) • (EDPF) 경험증진자금 중점지원국을 대상으로 협력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하고 우량 후보사업을 발굴하여,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증진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p. 57) • 경험증진자금 중점지원국을 대상으로 협력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하고 우량 후보사업을 발굴하여,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증진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p.72) • 소규모 인프라 구축,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ODA) 결과를 토대로 민간 참여형 대규모 사업으로 연계·확장하여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p.169) • 후속사업으로 환경시설·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이 가능한 프로젝트형 ODA 사업 발굴 및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p.169) • (통관애로 해소) 개도국 세관의 관세행정 현황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개도국의 통관절차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 (전자통관 국제표준) 개도국 세관 대상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전자통관 국제표준 주도권 선점 (p.223) • (수원국 다양화)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아세안 중심에서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수원국 다양화 (p.235) • 스스로 세원 발굴·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우리 진출기업에 공격적 과세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도 및 국제조세 교육을 통해 자발적 발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 (p.279)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큰 협력국·분야 대상으로 對민간 금융지원 시범사업 추진 (p.20) • 개도국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기업·소셜벤처 등)을 발굴, 혼합금융(정부 사업비+우리 민간기업 투자) 기반의 임팩트 투자 확대 추진 (p.20) • 수원국 수요에 맞고 우리 기업 진출이 용이한 기후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 (p.21) • 재외공관·시행기관 등과 협업,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 지원 강화 (p.24) •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수원국 협의, 수원국의 기업협력 관심 분야 정보 수집 등 지원 (p.24) • 개발컨설팅 등 ODA 전문기업 육성 지원 및 국내외 ODA 조달시장에 대한 기업 진출 활성화 위한 규제혁신 등 추진 (p.24)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 / 그린·디지털 등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p.47) • (EDCF) 그린·디지털·보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협력국 등을 고려한 지역별 자원배분 (p.47) • 경험증진자금(EDPF) 중점지원국을 대상으로 협력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하고 우량 후보사업을 발굴하여,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증진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p.47) • (KSP) 협력국에 실질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하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에 유리한 우리 강점분야 및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책자문 성과 제고 및 민간 해외수주 기회 확대 도모 (p.47) • 식량·농업기술 등 K-농업 해외전파를 통한 국격 제고 및 기업 진출 기반 마련 (p.117) • 신제품 개발 및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되는 신규 설비 도입 컨설팅 집중 진행

문서명	한국 기업 진출 지원 내용
	(p.137) • 소규모 인프라 구축,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ODA) 결과를 토대로 민간 참여형 대규모 사업으로 연계·확장하여 환경기업의 해외진출도모 (p.157) • 후속사업으로 환경시설·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이 가능한 프로젝트형 ODA 사업 발굴 및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p.157) • (통관애로 해소) 개도국 세관의 관세행정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개도국의 통관절차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p.209) • (전자통관 국제표준) 개도국 세관 대상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전자통관 국제표준 주도권 선점 (p.209)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및 지원강화 (p.227)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청년·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그린분야 진출 지원 (p.21) • 그린뉴딜 ODA 분야의 청년·스타트업의 기술개발 및 확산 지원, ODA 후속사업에 대한 중 소·중견기업 타당성조사 지원제도 신설 (p.21) • 사업 발굴단계부터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기관과의 협의를 통한협조용자 추진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기반 마련 (p.24) •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 (p.29) • 국제기구 조달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애로사항 점검 등 실시 (p.29) • 중점협력국별로 대표적 만·관 전략패키지사업 1건 이상 발굴 노력→ 지원효과 극대화, 외교·경협관계 증진, 우리 기업·인력진출 확대 도모 (p.46) • 우리나라 통관 및 무역제도를 표준으로 개발도상국의 통관 및 무역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 수출기업 및 수출물품에 대한 지원 확대, WCO 등 무역 관련 국제기구내 국가 위상 제고 및 발언권 확보 등 (p.51) • ODA 중점협력국인 아프리카,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경제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및 지원 (p.168)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정부(유·무상)-시민사회-기업(해외투자 등) 간 연계 가능 사업의 발굴 기획을 통해 패키지 ODA 지원 (p.15) • 중소기업의 국제기구 ODA 사업 조달 참여 지원 및 수원국의 민자사업 참여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시너지 창출 (p.15) • 민자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KIND, MDB 등)과의 협업을 통해 PPP사업 발굴 추진 (p.24) • 민간기업의 CSR/CSV 활동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발굴 및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p.24)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 특히,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장대교량·공항·도시철도 및 교통 시스템 설계 분야 등의 사업을 적극 발굴 (p.8) •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ODA 사업을 우리 기업의 민간투자 등 후속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민간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Team Korea) (p.8) • 민간협력사업의 성공사례 축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를 뒷받침 (p.16)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 정책 수립 - 인프라 구축 - 인력 양성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 향후 우리 기업진출 및 투자·교역 확대 등 협력의 기틀도 마련 (p.9)

문서명	한국 기업 진출 지원 내용
	유무상 연계를 통해 정책컨설팅·시스템 구축·사후 운영관리까지 전단계를 통합 지원하고, 우리 IT 기업과의 지속적 협력기반 마련 (p.15)
민간의 개발컨설팅 참여 활성화 방안	MDB 신탁기금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컨설팅 참여 기회를 창출하고 수원국의 개발수요 발굴 및 사업화 (p.8)
농업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 농식품 제조·처리기술 전수 등 국내 농식품 기업과 연계하여 농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가공설비·기자재 수출도 측면 지원 (p.9) - 스마트팜 농산물의 브랜드 구축 및 공동 판매망을 확보하고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진출과도 적극 연계 (p.10) - 농업 ODA 사업을 통해 농업 부문 국제감축 사업의 추진기반 조성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도 지원 (p.11)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ODA 사업 과정에의 기여를 확대하고, 기업 ESG 공헌활동과의 연계도 활성화 (p.14)
교육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스타트업 등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개도국이 당면한 교육 현안 해소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p.10)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확대) 기업의 혁신적 기술 및 ESG 활동과 연계한 ODA 사업 발굴을 통해 ODA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 (p.5) (민간재원 활용) EDCF와 경험증전자금(EDPF) 연계 등 혼합금융 통한 대형인프라 개발 지원 촉진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대 (p.6) (기업 육성 지원) 개발컨설팅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국내외 ODA 조달시장에 대한 기업 진출 지원, 현장 애로 규제혁신 (p.6)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개도국 당면 현안 해소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판로·시장 확보에도 기여 (p.7) - 민간이 제안한 공모사업 중 과기·ICT 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기업·NGO 등의 개발협력 참여와 해외진출기반 강화를 유도 (p.7) - 정책컨설팅을 통해 한국의 과기·ICT 관련 법제도·표준 등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표준 선진화 및 양국 기업간 원활한 교육·투자 활동에 기여 (p.7) 우리 기업·기술의 수출을 지원하는 PIS펀드(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GIF펀드(글로벌 인프라 펀드) 등 민간·매칭펀드와의 협업을 추진 (p.10) - 한국형 디지털 농업행정시스템 전수를 통해 개도국 농업행정의 현대화에 기여 및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도 측면 지원 (p.11) - APT(아태지역 전기통신발전협의체) 특별기여금 프로젝트 등 역내 협력을 강화하여 선진 ICT기술을 전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장려 (p.16)
민간부문 참여 전략 (2022)	(기업) 개도국 시장 진출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도움 (p.5) - 개도국 내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해 ESG 등 비재무적 평가 가치 제고 및 잠재적 구매자 확보 가능 (p.5)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큰 협력국·분야 대상으로 對민간 금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 지원 노하우 축적 (p.13) - 컨설팅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개도국 내 활동기반 조성 기여 (p.18)
다자협력	사업 발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다자협력을 레버리지로 삼아, 유망 인프라 사업의 우리

문서명	한국 기업 진출 지원 내용
추진전략	기업 참여 가능성 제고 (p.13) 우리나라와 협력국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확대 (p.17)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발굴 단계) 유·무상 ODA(EDCF, KOICA 사업)뿐 아니라, 국내기업진출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KSP 사업 선발시 가점 부여 (p.8)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	(시장창출) ❶우리기업 참여 조건인 EDCF + ❷수원국 재정사업에 대한 EDPF 연계 지원을 통해 ❸우리기업과의 협력기회 확대 유도 (p.8)

⑤ 봉사단의 목적·목표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지속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봉사단 및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양성하고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부가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해 어떠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 문서 내에 포함된 ‘청년’, ‘봉사’의 키워드를 분석함. 구체적으로는 청년과 봉사의 키워드를 통한 지향점, 목적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문서는 해외 봉사단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 개선과 활성화와 관련한 많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문서들은 봉사단이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으로 ‘전문가로의 성장과 취·창업에 대한 기회’를 제시하고 있음. ‘국제기구 개발협력 전문가로의 성장 기회 제공, 취·창업 연계 강화’ (‘24년 종합시행계획), ‘실무형 인재양성 비중 확대, 청년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지원’ (‘23년 종합시행계획), ‘ODA 경험자의 관련 분야 진출 위한 역량 강화’ (‘23년 종합시행계획), ‘해외사무소 인턴(YP) 등 ‘인재 양성사업’ 경력을 선호’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 등이 그 내용임.
- 정부의 외교 문서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는 봉사단이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주 참여자인 ‘청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내용을 제시함. 첫째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주로 해외에서의 활동, 현장 경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둘째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취·창업임.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 기회 확대, 개발협력인재(YP 등)·해외봉사단 등 청년층의 현장 경험 기회 확대·취·창업 연계 강화’ (‘24년 종합시행계획), ‘청년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지원, 해외봉사단 등 청년의 현장 경험의 기회 확대 및 전문성 축적’ (‘23년 종합시행계획), ‘청년·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그린 분야 진출, 청년·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및 확산 지원, 많은 청년들이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ODA 활동을 경험’ (‘22년 종합 시행계획), ‘국제기구 파견을 통해 청년들의 국제감각 배양 및 취업 경쟁력 제고’ (‘22년 종합시행계획), ‘우리 청년 국제기구 진출’ (다자협력 추진전략), ‘사업비 내 인건비 비중 조정을 통해, 청년 채용 및 근무여건 개선’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 ‘그린뉴딜 ODA를 통한 청년·스타트업 정책적 지원’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그러나 해외 봉사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통한 개도국의 종합적 또는 특정한 발전에 대한 기여의 내용은 부재함. 이는 청년과 봉사단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는 개도국이 아닌 ‘한국’을 위한 것으로 기획되어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해외 봉사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자들의 세계시민의식이나 글로벌 마인드, 개도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유일한 내용은 <‘24년 종합시행계획>에 제시된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 기회 확대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임.

[표 11]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 ‘봉사’, ‘청년’ 관련 내용

문서명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청년층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 및 현지사무소 파견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 취업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p.21) • 국제기구 파견 및 해외봉사단 등 ODA 관련 경력 인정을 통한 취업 지원 및 ODA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 (p.21)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 기회 확대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지역별 또는 국제기구 개발협력 전문가로의 성장 기회 제공 (p.36) • (일자리 창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을 고려한 사업 발굴 (p.41) • 개발협력인재(YP 등)·해외봉사단 등 청년층의 현장경험 기회 확대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한 사업 지속 확대, 취·창업 연계 강화 (p.41) • 개발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외봉사단·인재양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p.75)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해외봉사단원(WFK) 현장경험(사업 발굴·시행) 확대, 실무형 인재양성 비중 확대 (p.25) •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인턴 등 파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지원 (p.25) • (일자리 창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을 고려한 사업 발굴 (p.31) • 해외봉사단 등 청년의 현장 경험의 기회 확대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한 사업 강화, 귀국 후 일자리까지 고려한 사업 적극 발굴 (p.31) • 개발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외봉사단·인재양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p.67)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청년·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그린분야 진출 지원 (p.21) • 그린뉴딜 ODA 분야의 청년·스타트업의 기술개발 및 확산 지원, ODA 후속사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타당성조사 지원제도 신설 (p.21) • 보다 많은 청년들이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ODA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 대상 개발협력 참여 프로그램 인원 확대 (p.33) •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해외봉사단(WFK) 파견 등 정상화, 국제기구 파견 확대를 추

문서명	내용
	진, 국제감각 배양 및 취업 경쟁력 제고 (p.33) • 귀국 봉사단원 취업컨설팅(개발협력커리어센터) 및 경력개발 지원(STEP-Up) 등 ODA 경험자의 관련분야 진출 위한 역량 강화 (p.32) • (상생 발전)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을 고려한 사업 발굴, 개도국 역량제고를 위한 연수·장학사업의 내실화 (p.33) • 해외봉사단 등 청년의 현장 경험의 기회 확대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한 사업 강화, 귀국 후 일자리까지 고려한 사업 발굴·개선 (p.33)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청년층의 해외진출 및 현장 경험 기회 확대 지속 지원 추진 (p.19) • 국제기구 파견을 통해 청년들의 국제감각 배양 및 취업 경쟁력 제고 (p.19) • 중장기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및 귀국 봉사단원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STEP-Up)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p.19) • 우리 정부의 대외전략(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및 국정과제(청년 일자리창출 등)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국제 개발협력 사업 의지에 동참 (p.134)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 현장 경험을 다수 보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봉사단파견과 연계 강화 및 참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 제공 (p.10)
다자협력 추진전략	• 우리 청년 국제기구 진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확보, 정보 플랫폼 활성화 (p.16)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	• (프로그램 내실화) 봉사단원이 사업발굴부터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 사업관리 내실화등의 봉사 품질 및 사업 수행역량 제고 (p.7) • (학점인정 지원) 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 설치 대학 중심으로 학점인정 자율협약 확산, 재학생들의 봉사 참여환경 개선 (p.7) • (인식 제고) 해외봉사단 활동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 → 원활한 사회 진출의 선순환 조성 (p.7) • 기업의 ESG 경영, 공유가치 창출(CSV) 등과 연계, 봉사경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민간협력 확대 추진 (p.7) • (취·창업 지원) 'KOICA 커리어센터' 중심으로 취·창업 지원을 내실화, 복귀 해외봉사단원 등의 각 분야 진출 지원 (p.8) • (창업 지원) 귀국 봉사단원 등 대상으로 창업 전 사회화 경험 지원 (p.8) • (봉사단) 봉사활동과 사업기획을 동시 체험할 수 있도록 소규모 현장사업 확대 및 프로그램 관리 내실화 (p.9) • (인재 배출구조 조정) 인재파견 사업구조를 현행 WFK 봉사단 중심 → 현장 수요 높은 개발협력 인재양성사업(YP 등) 비중 점진 확대 (p.10) • (NGO 인재 채용 지원) 시민협력 사업의 심사기준 개선 및 사업비 내 인건비 비중 조정을 통해, 청년 채용 및 근무여건 개선 추진 (p.14)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그린뉴딜 ODA를 통한 청년·스타트업 정책적 지원 (p.14) • 그린뉴딜 ODA 분야의 청년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사업 확대 추진 (p.14)

3. 협력대상국과 협력하는 방식

1) ODA 비구속성 비율

- 정부는 <3차 종합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무상 95%, 유상 60% 이상으로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2023년 비구속성 원조 비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과 2022년 통계를 비교해 향후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비구속성 원조의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 큰 방향을 파악하고자 함. 2021년 ODA 비구속성 비율은 66.4%이고, 2022년은 62%임 (약정액 기준). 2021년 무상 ODA 비구속성 비율은 86.2%, 유상 ODA 비구속성 비율은 54.1%이고, 2022년 무상 ODA 비구속성 비율은 88%, 유상 ODA 비구속성 비율은 46.3%임. 전반적으로 무상 ODA는 비구속성 목표에 근접하고 있지만, 유상 ODA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

[표 12] 2021~2022년 한국 ODA 비구속성 비율 (약정액 기준)

연도	전체 ODA 비구속성 비율	무상 ODA 비구속성 비율	유상 ODA 비구속성 비율
2021	66.4%	86.2%	54.1%
2022	62%	88%	46.3%

* OECD의 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출처: ODA Korea. 2024. 비구속성현황. ODA 통계 (odakorea.go.kr). (검색일: 2024년 9월 11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통계 담당자가 제시한 정보 (2024년 10월 8일)

- 한국 정부의 ODA 비구속성 비율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함. 무상 ODA의 경우에는 목표인 95%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86~88% 수준을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비해, 유상 ODA는 46~54%대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정부는 ODA의 질을 대표하는 지표인 비구속성 비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별히 유상 ODA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2019~2020년 한국 ODA의 구속성 ODA의 91%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함 (DCD-DAC, 2022:8). 또한 유상 ODA는 비구속성 목표치를 60%보다 더욱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강조되는 '국익' 추구의 영향으로 유상 ODA를 통한 한국 기업의 이익 확보가 강조될 수 있으며, 이는 유상 ODA의 비구속성 비율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함.
- 비구속성 원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무상 원조를 수행하는 개별 부처 및 시행 기관별 비구속성 원조 비율 현황임. 아래 표는 2023년 ODA 시행 정부 부처 및 시행 기관의 구속성 원조 비율을 보여줌. 경찰청, 교육부,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기관은 구속성 원조 비율이 100%이며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0%임. 유상 ODA 시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41.1%임. 반면 무상 ODA 시행 기관인 KOICA는 5.5%로 양호한 편임. 그리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기관은 구속성 원조 비율 0%로 매우 양호함. 무상 ODA 시행 기관 35개 기관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2022년 88%인 점을 고려할 때, 많은 무상 ODA 시행 부처 및 기관들이 ODA 비구속성 비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표 13] 2023년 ODA 시행 정부 부처 및 시행 기관별 구속성 원조 비율

(2023년 잠정 통계 기준)

번호	시행기관	구속성 원조 비율	2023년 총 사업비 (증여등가액 기준, 백만원)
1	경찰청	100.0%	1.840648
2	교육부	100.0%	80.295975
3	국무조정실	100.0%	8.366252
4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100.0%	0.114854
5	기상청	86.5%	3.707417
6	질병관리청	46.5%	4.720451
7	고용노동부	44.2%	3.650367
8	한국수출입은행(EDCF)	41.1%	780.191271
9	농림축산식품부	41.0%	70.145213
10	문화체육관광부	39.2%	10.054928
11	행정안전부	21.9%	11.803812
12	관세청	18.6%	5.96517
13	여성가족부	17.7%	2.857558
14	보건복지부	15.2%	35.871156
15	해양수산부	15.1%	16.405154
16	국토교통부	12.8%	15.741795
17	법무부	6.4%	3.274018
18	한국국제협력단(KOICA)	5.5%	731.51612
19	산업통상자원부	3.6%	55.238439
20	기획재정부	0.1%	15.275401
21	외교부	0.1%	330.150272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0%	11.899345
23	농촌진흥청	0.0%	24.469529
24	문화재청	0.0%	3.285617
25	산림청	0.0%	14.758943
26	조달청	0.0%	0.140887
27	중소벤처기업부	0.0%	4.167653

번호	시행기관	구속성 원조 비율	2023년 총 사업비 (증여등가액 기준, 백만불)
28	지방자치단체(경기도)	0.0%	1.664475
29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0.0%	0.03637
30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0.0%	1.140511
31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0.0%	0.034456
32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0.0%	0.137406
33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0.0%	0.038284
34	통계청	0.0%	3.086375
35	특허청	0.0%	1.961701
36	환경부	0.0%	15.783472

출처: 외교부 개발협력국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게 제공한 자료를 의원실로부터 협조를 받아 확보하고, ODA Korea에 업로드된 연도별 ODA 지원 실적⁵⁾의 2023년 실적(잠정)을 다운로드하여 평가팀이 정리함.

- 한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OECD DAC가 2024년 발간한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는 구속성 원조를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한국 기업에 단기적 이익을 주는 협소한 접근은 한국 기업의 범주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기회를 포기할 수 있다”고 설명함 (OECD, 2024). 즉, 국제개발협력 조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을 우대하는 구속성 정책이 도리어 기업이 국제 원조 시장에 도전하고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여 비구속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type=Stats#/tileLayout>

4. 인류 공동의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성찰적 접근

국제사회 공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인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2022년 1월 발표된 <세계불평등보고서>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부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극도로 심해졌다”고 밝히고, “세계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소득의 52%와 자산의 76%를 점유했다”는 내용을 제시함.⁶⁾ 세계은행그룹은 <2023 in Nine Charts: A Growing Inequality>를 제시하며 2023년은 불평등의 해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 분쟁, 폭력, 식량위기의 위협을 언급함.⁷⁾ 기후위기는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의 근본적인 전제를 바꾸는 요소로 작동함.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은 성장과 개발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심화는 지구촌 구성원들이 성장 위주의 발전 방식 대신 성찰적 발전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줌. 이에 본 보고서는 <3차 종합기본계획>의 지난 3년간의 국제개발협력이 인류가 처한 두 가지 위기인 불평등 심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1) 국제개발협력의 불평등 해소 노력

- 2021~2024년의 기간 중 발간된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에서는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매우 드물게 제시되고 있음. <3차 종합기본계획>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교육·보건·사회 안전망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개도국 내 사회 불평등 해소 기여’를 제시하고, <’21년 종합시행계획>은 방향으로 ‘수원국 내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5P 가치 추구’를 제시함. 그 외,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과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은 성불평등을 제시함.

[표 14]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 ‘불평등’ 관련 내용

문서명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교육·보건·사회안전망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개도국 내 사회 불평등 해소 기여 (p.12)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기본 방향) 수원국 내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5P(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가치 추구 (p.16)
국제개발협력	• ODA 전략, 정책, 사업 전반에 성평등을 주류화하고,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직접 목표

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2/08/ZZ3Y6CM7WZF3FJNZE3CQRHIXAA/ (검색일: 2022년 1월 23일)

7) <https://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23/12/18/2023-in-nine-charts-a-growing-inequality> (검색일: 2024년 10월 29일)

문서명	내용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로 하는 사업도 시행 - 성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과 사회적 관계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p.11) •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시 체크리스트〉 ② 성 분석을 통해 협력국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에서의 성평등 고려사항을 적절하고 명확하게 포착하였으며, 성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p.13) ⑦ 기획된 사업 활동을 통해 성 불평등을 완화 또는 극복할 수 있는가? (p.13) • (영향력) 성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규범과 제도의 변화, 여성 권한 강화 수준 등 상위수준의 성과 평가 (p.19)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 여성의 지위 제고와 성평등 제도기반 구축 (p.17) • 중장기적으로 여성 인권 제고, 폭력·악습 저감, 사회진출 여건 개선 등 성평등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강화·정책컨설팅을 제공 (p.17)

- 불평등 이슈는 불평등 대상자를 고려하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음. 평가팀은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불평등의 대상을 규정하는 단어로 ‘난민’, ‘소외’, ‘차별’, ‘취약’, ‘평등’, ‘폭력’, ‘젠더’를 제시하고, 정책 문서를 단어를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불평등과 관련된 용어인 난민, 소외, 차별, 취약, 평등, 폭력, 젠더 등과 관련해 정책 문서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난민과 관련해서는 ‘분쟁·난민 등 인도적 지원 수요 발생 원인 해소, 아동·여성·난민 등 인도적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점지원’ (3차 종합기본계획), ‘분쟁·취약국의 여성·아동·난민 등을 우선 지원,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제공’ (‘23년, ‘24년 종합시행계획), ‘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추진’ (‘22년 종합시행계획),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난민 피해 최소화,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21년 종합시행계획), ‘난민 보호’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 (다자협력 추진전략) 등과 같이 난민에 대한 지원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소외’와 관련해서는 ‘소외계층 대상 문맹률 개선,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교육·보건·사회안전망 등의 제도적기반을 확충’ (3차 종합기본계획),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확대 지원’ (‘24년 종합시행계획), ‘기초·문해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본권 보장, 보건의료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대상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 조기발견 등 지원’ (‘24년 종합시행계획), ‘교육소외계층 대상 기초·문해교육 지원’ (‘23년 종합시행계획),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도주의 기반 취약계층 지원 강화’ (‘22년 종합시행계획), ‘의료소외지역’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교육소외계층 대상 지역학습센터를 활용한 기초교육 지원’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디지털 격차,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 소외된 도서·원격지 등에 전력 보급을 확충’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등을 제시함. 이 같은 내용들을 보

면, 교육과 보건의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들의 소외성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

- ‘차별’을 명시한 내용은 단 두 가지임. ‘인종 차별 해소 및 인권 침해 예방, 민주주의 수호 및 공정한 사법체계 구축 등을 통한 보편적 인권 증진 사업 추진’ (‘22년 종합시행계획), ‘전쟁, 테러, 차별 등 국제사회 공동의 이슈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 제고’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으로, 보편적 인권과 국제사회 공동의 이슈로서 차별 해소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평등’과 관련한 내용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교육·보건·사회안전망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개도국 내 사회 불평등 해소 기여’ (3차 종합기본계획), ‘양성평등 분야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아태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23년 종합시행계획), ‘ODA 사업 추진시 주요 목표에 ‘성평등 요소’를 포함’ (‘23년 종합시행계획), ‘평등·신뢰 사회기반 마련, 여성의 지위 제고와 성평등 제도기반 구축, 성평등 제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농업 개발협력은 빈곤퇴치, 기아종식뿐 아니라 보건·기후변화·일자리·성평등을 포함한 여러 SDGs 달성과 밀접하게 연계’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임. 주로 양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임.
- ‘취약’의 키워드로는 많은 내용이 제시됨.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로·기초위생 역량 강화와 함께 분쟁·취약국 및 취약계층 지원, 식량지원·교육 등 기본적 삶 보장, 취약 분야 인도적 지원 확대, 아동·여성·난민 등 인도적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점지원’ (3차 종합기본계획), ‘취약계층 보편적 건강보장, 인도적 위기 상황 내 취약계층(여성·아동·난민 등) 우선 지원 원칙, 취약계층 교육 확대,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 수원국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24년 종합시행계획), ‘취약분야 및 국가발전 전략 맞춤형 지원, 취약국 식량지원·농업기술 개발 지원,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난민 우선 지원,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 보건 취약국가 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3년 종합시행계획), ‘취약국·취약계층 피해 완화 및 경제 회복력 강화 지원, 취약계층·취약국 인도적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분야 및 국가발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분야 사업 확대,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 (‘23년 종합시행계획), ‘취약지 주민 대상 기초적인 생활 여건 지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 취약계층아동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대상 포용적 직업기술교육 지원’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취약계층 대상 식량 접근성 개선’ 등임. 주로 대상으로서의 취약국과 취약계층 및 취약 분야에 대한 그린 ODA, 교육, 보건의로, 농업, 식량, 디지털, 직업교육 및 인도적 지원, 사회 안전망 지원을 내용으로 함.

- ‘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적음. ‘분쟁하 성폭력 예방 등 역내 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인태전략 이행계획), ‘분쟁하 성폭력 대응 사업 실시’ (‘24년 종합시행계획),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프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전수’ (‘23년 종합시행계획),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난민 피해 최소화, 여성의 고용 유지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지원’ (‘21년 종합시행계획),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 예방, 폭력·악습 저감 등’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 등임. 주로 분쟁하 성폭력, 여성 대상 폭력 방지,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 예방, 저감 등 여성, 취약계층 등 약자에 대한 폭력을 대상으로 함.
- ‘젠더’와 관련한 내용은 매우 적음. ‘젠더 관련 이슈 대응 강화, 사업 계획 수립 시 젠더마커 및 관련 성과 지표 설정 검토, 리우 마커와 함께 젠더 마커 도입 및 활용 방안 검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젠더 마커와 관련된 성과 지표 설정 권고’ (‘21년 종합시행계획), ‘젠더마커 적용 사업 비율 확대, 국내·현지·타 공여 기관 젠더 전문가 자문 요청, 위험 요인 및 의도치 않은 결과 대처를 위해 젠더 전문가 활용’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등으로, 주로 젠더 마커와 전문가 활용과 같은 도구적 수단에 대한 내용임.

[표 15]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의 불평등 관련 '난민', '소외', '차별', '평등' 내용

문서명	난민	소외	차별	평등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분쟁·난민 등 인도적지원 수요 발생원인 해소 및 지원활동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HDP 연계 이행전략 마련 추진 (p.10) - 아동·여성·난민 등 인도적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점지원,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시 젠더 및 인권에 대한 고려 강화 (p.10)	- 소외계층 대상 문맹률 개선, 기초직업 교육을 통한 생계유지 지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p.11) -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교육·보건·사회안전망 등의 제도적기반을 확충하여 개도국 내 사회 불평 등 해소 기여 (p.12) - 격오지(도서·산간), 여성, 장애인 등 개도국 내 디지털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구축 지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이동형 정보접근센터 및 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센터 구축 지원 (p.15)	해당 내용 없음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교육·보건·사회안전망 등의 제도적기반을 확충하여 개도국 내 사회 불평 등 해소 기여 (p.12)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분쟁·취약국의 여성·아동·난민 등을 우선 지원 (p.39) -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제공 (p.255)	-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확대 지원 (p.21) - 교육소외계층(학교 밖 청소년, 비문해 성인) 대상 기초·문해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본권 보장 (p.147) - 보건의료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대상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 조기발견 등 지원 (p.161)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분쟁·취약국의 여성·아동·난민 등을 우선 지원 (p.28) - 국내에 입국하여 보호를 요청한 외국인에 대해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제공 (p.231)	교육소외계층 대상 기초·문해교육 지원하여 교육 기본권 보장 기여 (p.123)	해당 내용 없음	양성평등분야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및 아태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p.215)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도주의 기반 취약계층 지원 강화 (p.16)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도주의 기반 취약계층 지원 강화 (p.16)	인종 차별 해소 및 인권 침해 예방, 민주주의의 수호 및 공정한 사법체계 구축 등을 통한 보편적 인권 증진 사업 추진 (p.15)	해당 내용 없음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난민 피해 최소화, 여성의 고용 유지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지원 (p.13) -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풍부한 현지 활동 경험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취약계층 중점 지원 코로나19로 더 취약한 상태에 직면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ODA 사업 추진시 주요 목표에 '성평등 요소'를 포함하도록 시행기관 인식 제고, 사업기획 및 평가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젠더마커와 관련된 성과 지표 설정 권고 (p.16)

문서명	난민	소외	차별	평등
	한 여성·아동, 소수민족, 난민 등 긴급지원 추진 (KCOC) (p.13) - 특히 취약계층(난민·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여파 경감 지원 추진 (p.18)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국내로 입국하여 보호를 요청한 외국인에 대해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제공 (p.105) -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p.105)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해당 내용 없음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사회 실현을 위해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이종전략 접근 채택 (p.1) - 현지 관계자 중 소외계층 의견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설문, 면담, 포커스그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 취합 (p.18) - 사업 전 과정에 여성 참여도, 남녀(소외계층)의 균형있는 사업 수혜와 영향 등을 '성평등 스펙트럼'을 참고하여 점검 (p.19) - 여성, 청년,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과 군서도서 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매커니즘 촉진 (p.24)	해당 내용 없음	-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한 강화 (p.6) - 성평등한 ODA를 통한 성차별의 근본적 원인 해소 및 전환적인 변화 추구 (p.6) - 성주류화와 성평등 단독목표 사업 시행의 이종전략 추진 (p.6) - 차별적인 제도와 문화가 내재된 사회에서 ODA 사업 수행 시 성평등을 영속시킬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요인 대응이 필수 (p.7) - 성평등을 위한 전환적 성과 도출을 위해 성별 역학관계, 사회 규범, 가부장적 관습 등 변화 촉진 노력 (p.7) - 사업이 전환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성평등 스펙트럼'을 활용·점검하여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ODA 추진 (p.7) - G10 위상에 걸맞게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ODA를 양적으로 확충하여 글로벌 수준의 선진 국가 도약 (p.7) - 보건 및 인구, 사회인프라 외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기수립된 분야별·지역별 개발협력전략*과 국가협력전략(CPS)에 부합하는 성평등 및 여성

문서명	난민	소외	차별	평등
				권한 강화 사업 확대 추진 (p.7) • 성평등한 경제활동 기회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지역 개발, 직업훈련, ICT 분야에 집중 (p.8) • 성평등한 의사결정, 여성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사회 참여 촉진, 리더십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p.9) •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교육시설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p.9) • (공공 행정)성평등과 여성 권한강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 조성, 젠더기반 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법제 수립 등 (p.9) • 분쟁, 감염병, 기후변화, 재해 등 개도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성평등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지원 (p.10) • (분쟁·재난) 피해 지원, 회복, 재건 등 사업 수행 시 성평등 및 권한 강화 요소 포함 (p.10) • (기후변화)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및 재난피해 경감, 성평등한 그린 분야 소득창출 기회 및 기후회복력 증진 (p.10) • ODA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성평등을 독립목표로도 대응하는 이중전략 추진 (p.10) • ODA 전략, 정책, 사업 전반에 성평등을 주류화 하고,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직접 목표로 하는 사업도 시행 (p.11) • OECD DAC 젠더마커 적용 사업 비율 확대와 성평등 및여성 권한 강화 사업의 체계적·효과적 시행 (p.16) • (성 분석) 사업 타당성·기획조사 시 성평등 현황을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 발굴에 활용 (p.12) •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 안건에 성평등과 여성 권익 강화를 포함하여 관련 수요와 현황 파악

문서명	난민	소외	차별	평등
				(p.12) • 성평등을 고려하지 않거나(gender-blind) 젠더 중립적 사업이 실제로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p.13) • (위험분석) 젠더기반폭력, 돌봄노동 부담, 성평등 이슈에 대한 반감증가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사업관리 필요 (p.13) • (지표설정) 사업 성과프레임워크에 성평등 기대 효과를 명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정성 지표 수립 (p.14) • 협력국 정부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에 대한 지지와 예산 확대를 위한 협의 지속, 시민사회를 활용한 현지인 인식제고 등 (p.15) • (기타 고려사항)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가 주요 목적인 사업은 수행기관의 성평등 전문성, 공헌도, 정책·규범 이행 여부 등 면밀히 검토 (p.15) • 특히 성평등을 직접 목표로 하는 사업의 경우 젠더 권력관계, 사회문화규범을 개선하는 데 남성(소년)의 참여 필수적 (p.16) • (사업평가) 데이터는 윤리적, 참여적으로 수집하여 성평등 관점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학습에 활용 (p.18) • (일관성) 국내외 성평등 규범·정책과 사업의 부합성, 여타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사업과의 보완성 검토 (p.19) • (지속가능성) 여성 권한 강화, 성평등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역량과 제반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 (p.19)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해당 내용 없음	• 소외지역(농촌, 지방 등)에 필수 인프라(도로, 전력 등)를 구축·개선하여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도농 발전격차 해소에 기여 (p.11) • 소외지역의 학교, 관공서 등에 인터넷망(브로드밴드, 통신망 등)을 확충하고, 정보접근센터*를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문서명	난민	소외	차별	평등
		구축하여 디지털 접근성 개선 (p.12)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난민 보호, 분쟁 피해지 재건, 치안 강화 등 평화 구축 지원 (p.18)	기초보건·영양실조 등 직접지원이 어려운 의료 소외지역의 경우, 국제기구·NGO 협업채널 적극 활용해 지원 (p.6)	해당 내용 없음	- 평등·신뢰 사회기반 마련 (p.13) - 성평등 제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강화·정책컨설팅 제공 (p.17)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해당 내용 없음	학교 밖 아동, 비문해 성인 등 교육소외계층 대상 지역학습센터를 활용한 기초교육 지원하여 교육 기본권 보장 기여 (p.6)	전쟁, 테러, 차별 등 국제사회 공동의 이슈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 제고 (p.12)	해당 내용 없음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농업 개발협력은 빈곤퇴치, 기아종식뿐 아니라 보건·기후변화·일자리·성평등을 포함한 여러 SDGs 달성과 밀접하게 연계 (p.1)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해당 내용 없음	-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디지털 격차 완화 지원 (p.6) -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 (p.12) -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산간 지역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비·소프트웨어 등 원격의료시스템 종합 지원 (p.13) - 소규모 독립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전력망에서 소외된 도서·원격지 등에 전력 보급을 확충 (p.14)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다자협력 추진전략	자유, 평화, 인권,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 등을 다자협력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 (p.11)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표 16]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의 불평등 관련 '취약', '폭력', '젠더' 내용

문서명	취약	폭력	젠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초위생 역량 강화와 함께 분쟁·취약국 및 취약계층 지원, 식량지원·교육 등 기본적 삶 보장 (p.7) • 취약 분야 인도적 지원 확대 (p.10) • 인도적지원-개발-평화간 연계(HDP Nexus) 강화, 인도적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통해 취약성을 완화하고, 갈등·분쟁 등 위험을 예방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평화 달성 (p.10) • 취약국·취약계층 지원 강화 (p.10) • 만성적 재난은 분쟁·취약국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자연재해 등 긴급 재난지원은 지역적 접근성 감안, 아·태 지역 중심 지원검토 (p.10) • 아동·여성·난민 등 인도적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점지원,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시 젠더 및 인권에 대한 고려 강화 (p.10) •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있어 정부-시민사회 협력 지속 확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ODA와 시민사회 활동간 협력을 위한場 마련 병행 (p.18)	해당 내용 없음	• 아동·여성·난민 등 인도적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점지원,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시 젠더 및 인권에 대한 고려 강화 (p.10)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개도국 취약계층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원국 맞춤형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지원 (p.17) • 인도적 위기 상황 내 취약계층(여성·아동·난민 등) 우선 지원 원칙하에 여성·평화·안보 관련 사업 확대 (p.19) • 기초교육·취약계층 교육 확대 등 인적 역량 강화 지원 (p.19) •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 사업 발굴 (p.21) • 재난구호, 감염병 대응 등 수원국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 확대 (p.39)	• 분쟁하 성폭력 대응 사업 실시, 여성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엔 인구기금(UNFPA) 지원 지속 (p.19)	해당 내용 없음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취약분야 및 국가발전전략 맞춤형 지원 (p.6) •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및 분쟁 등 위기 속 취약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p.9) • 취약국 식량지원·농업기술 개발 지원 (p.9) •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난민 우선 지원 (p.28) •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 사업 발굴 병행 (p.28)	• 몽골을 대상으로 한국의 성매매 등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프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p.215)	해당 내용 없음

문서명	취약	폭력	젠더
	• 취약국 등 전쟁·내전 피해국, 최저개발국·하위중소득국 대상 사업 지속 지원 (p.29) • 대상별(장애인·노인·취약계층 등) 정책수립 지원 등 복지 분야 ODA 사업 영역 확대 전략 검토 (p.145) • 보건 취약국가 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 (p.201)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코로나19 극복) 항구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취약국·취약계층 피해 완화 및 경제 회복력 강화 지원 (p.11) •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도주의 기반 취약계층 지원 강화 (p.16) • 수원국별 특성(소득수준 등), 취약분야 및 국가발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 맞춤형으로 지원 (p.19) • (인도주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인도주의 실현 사업 발굴 강화·내실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p.45) • 인도적 위기 원인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기획, 분쟁·취약국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간 연계 강화 (p.45)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분야 사업 확대로 사회적 위기회복지원,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 지원이 취약한 국가 대상 집중 발굴 (p.45) • 정보통신 인프라 부족 및 경제력 차이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 사업 발굴 병행 (p.46)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해당 내용 없음	•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난민 피해 최소화, 여성의 고용 유지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지원 (p.13)	• ODA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확대를 위해 시행기관 인식 제고 추진, 사업계획 수립 시 젠더마커 및 관련 성과지표 설정 검토 (p.16) • <성인지적 관점 제고 기반 강화> SDGs 분야별 지표, 리우마커와 함께 젠더마커 도입 및 활용방안 검토 (p.16) • ODA 사업 추진시 주요 목표에 '성평등 요소'를 포함하도록 시행기관 인식 제고 (p.16) • 사업기획 및 평가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젠더마커와 관련된 성과지표 설정 권고 (p.16)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 분쟁 및 취약상황 여성 지원 (p.6) • 취약상황에서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가 피해 방지	•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교육시설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p.9) • 성평등과 여성 권한강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 조성, 젠더기반	• OECD DAC 젠더마커 적용 사업 비율 확대와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사업의 체계적·효과적 시행 (p.11)

문서명	취약	폭력	젠더
이행 지침	(p.10) -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및 재난피해 경감, 성평등한 그린 분야 소득창출 기회 및 기후회복력 증진 (p.10) - 사업계획 내 명시한 수혜대상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양성(특히 취약 계층)의 참여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수단 활용 (p.16)	- 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법제 수립 등 (p.9) - 젠더기반 폭력 예방·대응 제도, 지원체계, 정책역량 개선 (p.9) - 사업관계자, 현지주민 대상 젠더기반폭력, 성비위 예방 교육 권고 (p.16) - 여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반감 등 잠재 위험분석 (p.20)	- 사업 기획방향, 목표, 지표 등이 젠더마커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p.13) - 국내·현지·타 공여기관 젠더 전문가 자문 요청, 현지활동인력 활용 시 그룹별 인력(성별, 연령, 민족 등) 선발, 여성 활동시간을 고려한 교육일정 수립 (p.16) - 위험요인 및 의도치 않은 결과 대처를 위해 젠더 전문가 활용 (p.17)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교원연수 등을 통해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문해교육·비형식교육(학교 밖 교육) 지원을 확대 (p.11)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난민지구·분쟁 취약지 주민 대상 기초적인 생활 여건 지원 (p.8)	-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 예방 (p.8) - 여성 인권 제고, 폭력·악습 저감 등 역량강화·정책컨설팅 제공 (p.17)	해당 내용 없음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 초중등 기초교육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 (p.4) - 취약계층아동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p.6) - 취약계층 대상 포용적 직업기술교육 지원 (p.8)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취약계층 대상 식량 접근성 개선 (p.7)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다자협력 추진전략	자유, 평화, 인권,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 등을 다자협력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 (p.11)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2) 국제개발협력의 기후위기 완화 노력

- 기후위기는 기아, 빈곤, 보건, 생산, 교육, 평화 및 인권과 젠더 등 국제개발협력의 모든 이슈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주제임.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3차 종합기본계획>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대외정책과 연계추진’의 내용을 밝히며, 큰 범주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략 문서들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다룸.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이슈에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 대응 영향 체계 보완’ (‘24년 종합시행계획) 등과 같은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함. 그리고 개발 자원과 관련한 내용도 제시하는데,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를 공동 설립하고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 적극 참여 (‘24년 종합시행계획), ‘녹색기후기금(GCF) 공여 약정 이행’ (‘23년 종합시행계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펀드에 신규 출자’ (‘22년 종합시행계획) 등이 이에 해당됨.
- ODA를 시행하는 개별 부처들은 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제시하는데, ‘기후 자원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개도국 기후 자원 조성 능력 배양’ (‘24년 종합시행계획 중 기획재정부), ‘중남미 소농의 기후위기 대응’ (‘23년 종합시행계획 중 농촌진흥청), ‘환경·기후에 특화된 ODA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 (‘22년 종합시행계획 중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과 토지 황폐화 복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21년 종합시행계획 중 산림청) 등이 있음. 또한 분야·주제별 전략에서도 ‘기후적응력 농업기술 개발·전수, 기후탄력적 농촌인프라 확충’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ICT를 활용한 기후대응·적응 역량 강화’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함. 주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기후자원, 소농의 기후위기, 기후탄력적 농촌 인프라, ICT 활용한 기후 대응·적응 등 각 분야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내용도 제시함.
- 또한 기후변화를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점할 수 있는 ‘이슈’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함. <‘24년 종합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함께 대등한 역할과 리더로 입지 강화’나 <‘23년 종합시행계획>이 밝힌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여 확대 및 기후변화 논의 주도권 강화’는 이를 뒷받침함.

[표 17]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의 '기후변화/위기' 관련 내용

문서명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개도국의 경제성장·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대외정책과 연계추진 (p.7) • 기후변화 및 글로벌 감염병에 따른 물류 장애 등으로 세계적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응, 식량(쌀) 지원 지속추진 (p.11) • 종합적 농촌개발 및 수원국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식량안보 및 영양상태 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 관개시설 확충, 농기계 보급 및 기술전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 농업역량 및 지역별 기후·정책적 특성 등 고려,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업 기획·보급 (p.11) • 기후변화 논의 선도 및 협력 강화 (p.13) • 국제사회 신기후체제 동참(‘21년~), P4G 정상회의(‘21년) 시 녹색의제 주도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 선도 (p.13)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및 녹색기후기금(GCF) 등 환경분야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MDB 사업과 유상사업의 연계강화 (p.13) • 베트남·미얀마 등 개도국과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하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국외 온실가스 감축지원(목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제거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역량강화 (p.13)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기후변화 대응 및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그린 ODA 사업 확대 지속 추진 (p.23) • 우리 기업의 강점 기후변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 필요 사업 발굴 (p.23) • 개도국과 기후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국제감축사업을 ODA를 활용해 측면 지원 (p.23) • 환경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기반 강화 (p.24) • G7 기후클럽 가입 및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이슈에 선제적 대응 (p.24) •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를 공동 설립하고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 적극 참여 (p.24) • ODA 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을 평가 (p.24) • EDCF 사업 전 단계에 ‘기후변화대응 영향체계’ 보완 (p.24) • 기후재원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개도국 기후재원 조성 능력 배양 (p.57) • 기후대응 기여 다각화 및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 확대 도모 (p.57) • 지역별 기후변화 양상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보완 사업 지속 발굴 및 사업 간 연계 강화 (p.175) •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함께 대등한 역할과 리더로 입지 강화 (p.195)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산림 ODA 추진 체계 마련 (p.195) • 필리핀, 피지 대상 재난안전기술(홍수 예·경보 체계 등) 이전 및 개도국 재난관리 공무원 교육을 통한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협력국의 재난대응 역량강화 (p.217) • 개도국 재해경감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 지원 (p.25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녹색기후기금(GCF) 공여 약정 이행, 그린분야 국제기구 협력 확대 (p.6) • 기후위기·식량·디지털 등 기여 확대 (p.7)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여 확대 및 기후변화 논의 주도권 강화 (p.21) • 기후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 (p.21) • 「그린뉴딜 ODA 전략(‘21.7월)」에 따라 수원국별 특성·취약분야 및 국가발전전략 등을 중

문서명	내용
	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 추진 (p.6) •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용자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효율 등 사업 발굴·지원 다각화 (p.21)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달성 등 사업 기획·발굴 계속 (p.28) • 환경 분야 사업 외 ODA 전 분야 사업 발굴시 기후변화 대응요소 반영 (p.29) • 기후대응 기여 다각화 및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 확대 도모 (p.47) • 기후변화 대응 지원 (p.117) • ODA를 활용한 개도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지원을 통해 그린분야 협력수요 대응 및 글로벌 기후대응 동참에의 확대 (p.137) • 중남미 소농의 기후위기 대응 가뭄·병해충 저항성 강냉콩 2품종개발 (p.151) • 환경·기후에 특화된 ODA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 (p.157) • 지역별 기후변화 양상에 맞는 대응 방향 설정하여 보완 사업을 지속 발굴 및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증대 추진 (p.169) •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함께 대등한 역할과 리더로 입지 강화 (p.179) • 필리핀·피지 대상 재난안전기술 이전을 통한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협력국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p.195) • 몽골 내 기상관측데이터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상기후업무의 디지털화 지원 (p.223) •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p.223)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효적 전략 수립 및 실질적 사업 기획·발굴 필요 (p.11) • ODA 전반 혁신 및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역량 집중 추진 (p.11) • 개도국 특수성을 반영한 녹색전환 지원, 정상외교 성과 가시화·확산 및 국제논의 주도 등 글로벌 협력 선도 (p.11) •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위기 심화에 대응하여 예멘, 시리아 등 분쟁지역 대상 식량지원사업 확대 (p.17) • 친환경 농수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p.17) • 그린뉴딜 ODA 개념과 측정방법을 정립하여 사업분류 객관성 확보 (개념) 개도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상생의 녹색회복에 기여하는 ODA (p.19) •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 납입 이행(초기 1억불 + 자원보충 2억불),사업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인증기구* 승인 추진 (p.20)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펀드에 신규 출자 검토,협조용자 플랫폼 및 연례 협의 등을 통해 그린뉴딜 사업참여 확대 (p.20) • 독립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 등 스마트 전력시스템 보급확대 및 ICT 활용 재난예보·수자원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적응 지원 (p.22) • 한국판 그린뉴딜 5대 분야와 연계하여 국내 녹색산업의 개도국사업진출 컨설팅 및 자금조달 과정을 지원하고, UNFCCC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능력 배양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 신설 (p.51) • 개도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역량 강화 및 KS 표준·인증체계 전수 등 (p.124) • 신남방국가 등 중점협력국 대상 그린뉴딜·탄소중립 신규 사업 발굴·지원 등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 지원 (p.138)

문서명	내용
	• 효율적 사업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p.163)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21년)를 통해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를 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DA의 역할 모색 (p.16) •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 요소를 가미한 그린뉴딜 ODA 지원 및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분야 ODA 비중 확대 (p.14) • 기후변화-글로벌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세계 식량 공급망 붕괴로 취약국에서의 대량 기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적시 대응 (p.18) • 한국의 스마트 팜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지원, 국정과제, 신남방·신북방정책, 한-메콩 개발협력 양해각서('19.11.27) 등과 관련하여 스마트팜 수출 및 협력 강화 필요 (p.22) • 지역별 기후 및 정책 특성 등을 고려, 적정기술을 활용한 기후적응형 스마트팜 구축, 기후변화 대응, 하이테크 농업 도입 등 국가별 정책을 고려하고,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 인적역량 개발 등을 통해 수원국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 (p.22) • 우리 정부의 ODA 규모 확대 목표 및 대외적 공약을 이행하고, 주요정책(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ODA 추진 (p.68) • 개도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역량 강화 및 KS 표준·인증체계 전수 등 (p.116) • 인프라개발협력을 통해 2030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목표⑨ 지속가능산업화 및 혁신, 목표⑪ '지속가능도시', 목표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대응' 달성에 기여 (p.132) • 기후변화 대응과 토지 황폐화 복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맞춤형 ODA 사업 추진으로 개발도상국의 삶의질 향상 및 산림 협력 강화 (p.151) • 효율적 사업 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p.155)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 분쟁, 기후위기, 기아 등은 여성에게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와 조치 필요 (p.4) • 분쟁 및 취약상황 여성 지원: 분쟁, 감염병, 기후변화, 재해 등 개도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성평등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지원 (p.10) •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기에 사업 추진 시 젠더-환경(기후) 넥서스에 대한 고려 필요 (p.10) •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및 재난피해 경감, 성평등한 그린 분야 소득창출 기회 및 기후회복력 증진 (p.10) • 기후위기 피해 완화 사회보장·보험 및 자산형성 지원, 재해·재난 위험 경감 메커니즘에 성인 지적 관점 반영, 친환경농업·기술교육 (p.10)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 인태전략상 아세안 중점협력분야: 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등 (p.5) •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른 중점협력분야: 인프라,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 등 (p.5) • 공동 당면현안 해결: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p.14) • MDB가 지원하는 기후변화 사업에 EDCF가 보증을 제공하는 등 아세안 지역 기후변화 금융지원 확대에 기여 (p.14) • 기후위기 대응, 보건역량 강화 등 역내 공통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공여국과의 협력추진 (p.16)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 기후변화 적응력·회복력 제고 (p.14) • 주민 생활방식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식수시설 개선, 기후 스마트농업 확산 등 지원 (p.14) •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에 놓인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p.15)

문서명	내용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 기후적응형 농업기술 개발·전수 (p.11) • 기후탄력적 농촌인프라 확충 (p.11) • 기후변화 완화 기여 (p.11)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팬데믹, 기후변화 및 분쟁 등 쏠리구적 도전과제에 대해 ODA를 통한 선도적 협력으로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한 단계 도약 절실 (p.1)
민간부문 참여 전략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기술 지원 사업 발굴 등 (p.15) • 기후변화·환경 이슈, 코로나19 장기화 등 개도국 수요를 감안,기업의 기존 CSR 사업을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 추진 (p.17)
다자협력 추진전략	• 국제사회 수요와 우리 비교우위를 고려, SDGs 중 보건·복지, 교육, 혁신·ICT, 기후변화, 거버넌스·평화 중심으로 선도적 기여 강화 (p.10)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 ICT를 활용한 기후대응·적응 역량 강화 (p.14) • 개도국의 기후 예측·대응을 위해 우리 기상위성(천리안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상황 시 실질적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시스템 지원 추진 (p.14) • 개도국의 체계적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연계 강화 (p.14) • GCF(환경·에너지), GGGI(기후) 등 분야별 전문 국제기구와도 공동 협력사업 발굴 확대 (p.16)

3) 협력대상국의 민주주의 발전 지원

- 민주주의 발전과 같은 정치적 측면은 경제 및 사회적 측면의 발전 못지않게 협력대상국의 발전을 규정할 때 중요한 내용임. 민주주의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치 제도로로서의 민주주의 지원과 인권, 성평등, 언론, 시민사회 강화 등 넓은 의미로서의 민주주의 지원이 있음. 지속되는 미얀마 군부 집권, 2024년 태국 전진당 해산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기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지원은 매우 중요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에서 밝힌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은 매우 수가 적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2024년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수원국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역량강화 지원/수원국 선거 관리 기관의 선거 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선거 민주주의 정착·발전’과 <’23년 종합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전환기 민주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지원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협력대상국 선거 관리 기관의 선거 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선거 민주주의 정착·발전’, <’22년 종합시행계획>의 ‘전환기 민주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지원’, <’21년 종합시행계획>의 개도국의 선거 민주주의 발전 동력 지원이 실질적인 내용의 전부임. 이 모든 내용은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문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임.

[표 18]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 '민주' 관련 내용

문서명	내용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전환기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선거관리기법을 공유·전파하여 수원국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역량강화 지원 (p.291) • 수원국 선거관리기관의 선거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선거 민주주의 정착·발전 및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 평화와 정의·제도) 이행에 기여 (p.29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선거관련 지식·정보 교류를 통한 전환기 민주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지원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 (p.271) • 협력대상국 선거관리기관의 선거관리역량강화를 통한 선거 민주주의 정착·발전 및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 평화와 정의·제도) 이행에 기여 (p.271)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선거관련 지식·정보 교류를 통한 전환기 민주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지원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 (p.180) • 수원국 선거관리기관의 선거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선거 민주주의 정착·발전 및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 평화와 정의·제도) 이행에 기여 (p.180)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우리의 선거관리 지식·경험 등을 공유·전파하여 개도국의 선거 민주주의 발전 동력 지원 (p.156)

4) 협력대상국의 다원적 발전 지원

협력대상국의 발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 민간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상호 작용으로 실현됨. 시민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독립적인 주체이자, 정부 및 기업과 상호 작용하며, 균형과 견제 작용을 하며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음. 또한 발전의 다원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력대상국 내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여성, 아동, 난민,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등 취약층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보는 것이 중요함. 본 평가는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부가 개도국의 발전 주체인 현지 시민사회 및 취약층을 어떻게 판단하고 협력했는지를 평가함. 이를 통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개도국 다원적 발전 추구의 내용을 판단함.

① 협력대상국 시민사회 지원 내용

- 정부는 전반적으로 한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협력대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내용은 부족함. <3차 종합기본계획>은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대국민 인식 제고,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있어 정부-시민사회 협력 지속 확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ODA와 시민사회 활동간 협력을 위한 場 마련 병행'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원국 NGO와의 협력을 제시한 것은 '국내·현지 시민사회 역량 강화 예산도 확대 추진, 수원국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기여를 위한 개도국현지 지역사회(현지 진출 국내기업, 현지기업, 시민사회 등)와 협력 강화'('22년 종합시행계획), '수원국 NGO와의 협력 등 현

장 중심 지원 확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제반환경) 지역정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개인과 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성주류화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등으로 주로 큰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가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작성해 2019년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은 ‘파트너십 이행방안’에서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설정했음. 그러나 실제 2021년, 2022년, 2024년 4년간의 정부 정책 문서에서는 ‘개도국 시민사회’는 단 네 건의 정책 문서에서만 언급하고 있음.

[표 19]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 ‘협력대상국 시민사회’ 관련 내용

문서명	시민사회 관련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대국민 인식 제고,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있어 정부-시민사회 협력 지속 확대 (p.18)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ODA와 시민사회 활동 간 협력을 위한 場 마련 병행 (p.18)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시민사회 등 민관협력 공고화 (p.28) • 시민사회 협력 예산 비중의 확대 추진 및 시민사회 협력 예산중 국내·현지 시민사회 역량 강화 예산도 확대 추진 (p.28) • 수원국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기여를 위한 개도국현지 지역사회(현지 진출 국내기업, 현지기업, 시민사회 등)와 협력 강화 (p.29)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시민사회 전문성 활용) 시민사회 강점 분야(인도적 지원·보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수원국 NGO와의 협력 등 현장 중심 지원 확대 (p.7)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 시 체크리스트> ③ 사업대상국/지역의 시민(여성)단체 및 유관기관의 자문이나 참여가 있는가? (p.15) • (제반환경) 지역정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개인과 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성주류화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p.16) • <사업 수행 시 체크리스트> ⑤ 지역정부, 시민단체 등 현지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였는가? (p.16)

② 협력대상국 취약층 고려 내용

- 정책 문서에서 취약층 고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으로 구분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의 키워드를 분석함. <3차 종합기본계획>은 ‘아동·여성·난민 등 인도적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점 지원’이라는 방향을 제시함. 2021년, 2022년, 2023년 및 2024년 종합시행계획은 공통적으로 인도적 위기 상황 및 분쟁·취약국에서의 취약계층(여성·아동·난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 개별 시행 부처들도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개도국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 역량강화 지원’ (‘24년 종합시행계획 중 여성가족부), ‘대상별(장애인·노인·취약계층 등) 정책수립 지원’ (‘24년 종합시행계획 중 보건복지부), ‘해사 친환경·해양디지털 여성 역량강화 사업’ (‘23년 종합시행계획 중 해양수산부), ‘서자바주 취약계층 여성 대상 직업훈련 및 취·창업 교육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23년 종합시행계획 중 여성가족부) 등과 같이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상으로서의 여성 사업 또는 목적으로서의 여성 사업이 존재함.
- 권역별·주제별 전략 문서도 동일함. ‘지역 내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기초보건 제공, 모자·아동보건문제 개선, 여성 청소년 대상 교육기회 확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 ‘학교 밖 아동, 저개발국 학업중단 아동, 여성, 장애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 대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 등을 다자협력 전반의 기본 원칙’ (다자협력 추진전략),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 디지털 교육, 도서산간 지역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등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ICT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음.

[표 20]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 ‘취약층’ 관련 내용

문서명	취약층 관련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아동·여성·난민 등 인도적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점지원,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시 젠더 및 인권에 대한 고려강화 (p.10) • 소외계층 대상 문맹률 개선, 기초직업 교육을 통한 생계유지지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p.11) •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교육·보건·사회안전망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개도국 내 사회 불평등 해소 기여 (p.12) • 격오지(도서·산간), 여성, 장애인 등 개도국 내 디지털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구축 지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이동형 정보접근센터 및 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센터 구축 등 통신 및 인터넷 등 디지털 사회 기반 조성 지속 (p.15) • 개도국 현지 지역사회와 연대 형성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 개도국 지역사회의 선순환 사회·경제구조 창출에 기여 (p.16) •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대국민 인식 제고,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있어 정부-시민사회 협력 지속 확대 (p.18)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개도국 취약계층 보편적 건강보장과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수원국 맞춤형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p.17) • 인도적 위기 상황 내 취약계층(여성·아동·난민 등) 우선 지원 원칙하에 여성·평화·안보 관련 사업 확대 (p.19) • 기초교육·취약계층 교육 확대, 디지털 기반 교육격차 해소 및 고등·직업교육 지속 지원 등 중심으로 인적 역량 강화 지원 (p.19) •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등을 통해 인프라 부족 및 경제력 차이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 사업 발굴 (p.21)

문서명	취약층 관련 내용
	- 재난구호, 감염병 대응 등 수원국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 확대 (p.39) - 분쟁·취약국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난민 등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등 사업 확대 및 식수, 위생 등 여타 인도적 지원사업과 연계·발굴 (p.39) - 학습 결손·격차가 큰 교육소외계층(학교 밖 청소년, 비문해 성인) 대상 기초·문해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본권 보장 (p.147) - 여성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엔인구기금(UNFPA) 지원 지속 - 수원국에 우리나라의 우수 여성정책을 공유·전수하고, 개도국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 역량강화 지원 (p.239)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여성·아동 등 인도적 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 대상 지원 관련 논의 참여 병행 (p.17) - IT 봉사단 등을 통해 여성·아동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확대 (p.19) - 분쟁·취약국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난민 등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등 사업 확대 및 식수, 위생 등 여타 인도적 지원사업과 연계·발굴 (p.28) - 보건산업, 감염병대응, 건강증진, 원격의료, IT 기술 전수 등 보건분야 강점분야 발굴 및 대상별(장애인·노인·취약계층 등) 정책수립 지원 등 복지 분야 ODA 사업 영역 확대 전략 검토 (p.145) -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IMO 협약이행 역량강화 리더교육, 해사 친환경·해양디지털 여성 역량강화 사업 (p.169)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취약계층 여성 대상 직업훈련 및 취·창업 교육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p.215) - 몽골을 대상으로 한국의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프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p.215)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여성 인권 증진 등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지원 확대 추진 (p.15)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개도국 아동의 취학 지원 및 문맹률 개선 (p.15) -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도주의 기반 취약계층 지원 강화 (p.16) - 열린 사회 성명(G7 확대정상회의, '21.6월) 이행을 위한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 사업과 여성·아동 지원 사업 확대 추진 (p.45)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난민 피해 최소화, 여성의 고용 유지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지원 (p.13) -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풍부한 현지 활동 경험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취약계층 중점 지원, 코로나19로 더 취약한 상태에 직면한 여성·아동, 소수민족, 난민 등 긴급지원 추진(KCOC) (p.13) - 특히 취약계층(난민 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여파 경감 지원 추진 (p.18) - 수원국에 우리나라의 우수 여성정책을 공유·전수하고, 개도국 여성의 경제·사회적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 역량강화 지원 (p.131)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 G10 위상에 걸맞게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ODA를 양적으로 확충하여 글로벌 수준의 선진국가 도약 (p.7) - 보건 및 인구, 사회인프라 외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기수립된 분야별·지역별 개발협력전략과 국가협력전략(CPS)에 부합하는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사업 확대 추진 (p.7)

문서명	취약층 관련 내용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성평등한 경제활동 기회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 직업훈련, ICT 분야에 집중 (p.8) • 인적기반 마련을 통한 여성기본권 향상: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분야 지원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대표성을 제고 (p.9) • 분쟁 및 취약 상황 여성지원: 분쟁, 감염병, 기후변화, 재해 등 개도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성 평등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지원 (p.10) • (기후변화)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및 재난피해 경감, 성평등한 그린 분야 소득 창출 기회 및 기후회복력 증진 (p.10) • (양성참여) 사업계획 내 명시한 수혜대상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양성(특히 취약계층)의 참여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수단 활용 (** 사업내용 및 목적에 따라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과 수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시행) (p.16)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교원연수 등을 통해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문해교육·비형식교육(학교 밖 교육) 지원을 확대 (p.11) • 소외지역 개발 및 체계적 국토개발 지원 (p.11) • 소외지역(농촌, 지방 등)에 필수 인프라(도로, 전력 등)를 구축·개선하여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도농 발전격차 해소에 기여 (p.11) • 소외지역의 학교, 관공서 등에 인터넷망(브로드밴드, 통신망 등)을 확충하고,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하여 디지털 접근성 개선 (p.12) • 격오지에는 버스·트럭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정보접근센터 보급 (p.12) • ICT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라디오 등 방송·통신망을 개선하고, 방송시스템 구축·활용도 제고를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p.12)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 사하라 이남의 시급한 모자·아동보건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소·지소 건축·운영, 의료기자재 제공 등 1차 의료보건의제를 강화 (p.6) • 기초보건·영양실조 등 인도적지원 수요가 높으나 직접지원이 어려운 의료소외지역의 경우, 국제기구·NGO 협업채널을 적극 활용해 지원 (p.6) • (난민지구·분쟁 취약지) 해당 지역 내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기초보건을 제공하는 데 지원을 집중 (p.8) •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p.13) • 정규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역학습센터를 통한 문해교육 및 현지 노동시장에 맞는 직업기술교육을 제공 (p.13)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 청소년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교육·판로지원 등 여성 경제력 강화도 지원 (p.17) • 중장기적으로 여성 인권 제고, 폭력·악습 저감, 사회진출 여건 개선 등 성평등 제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강화·정책컨설팅을 제공 (p.17)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 (p.4) • 기초교육 분야 및 취약계층 대상 교육 ODA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의 강점인 ICT 원격교육 경험과 연계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 (p.6) • 취약계층 대상 교육 기회 확대 (p.6) • (취약계층 지원) 학교 밖 아동, 비문해 성인 등 교육소외계층 대상 지역학습센터를 활용한 기초교육을 지원하여 교육기본권 보장 기여 (p.6) • 취약계층아동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원격교육 확대) 저개발국 학업중단 아동 등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접근센터, ICT 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지원 (p.6)

문서명	취약층 관련 내용
	• 취약계층 대상 포용적 직업기술교육 지원 (p.8) • (디지털 교육) 여성, 장애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센터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p.8) • (국제사회 논의 참여) 소외계층 대상 기초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적극 발굴 (p.12) • (국제기구 협력 강화)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기초교육·직업기술교육 지원 및 권역별 사업 등 추진 (p.12)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 취약계층 대상 식량 접근성 개선 (p.7) • 식량 바우처·학교급식 제공 등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강화 (p.7)
다자협력 추진전략	• 자유, 평화, 인권,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 등을 다자협력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 (p.11)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완화 지원: 여성·아동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축소를 위해 IT 봉사단·ICT 교육센터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및 접근 기회 확대 (p.6) •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 (p.12) • 도서산간 지역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비·소프트웨어 등 원격의료시스템 종합 지원 (p.13)

5. ODA 자원 증대 및 배분

〈3차 종합기본계획〉은 ODA의 양적 규모 증대를 목표로 제시함. 또한 2022년까지 보건 분야 중점 지원, 그린·디지털·공공행정 ODA 확대 및 시민사회 협력 ODA 예산 비중 확대 노력을 밝힘. 이에 본 파트에서는 〈3차 종합기본계획〉이 제시한 다섯 분야의 ODA 규모 증대 성과를 확인함.

1) ODA 규모 목표 달성

- 정부는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증대해 옴. 먼저 〈3차 종합기본계획〉은 ‘ODA 총 규모를 2019년(3.2조 원) 대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종료되는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라고 ODA 규모 증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2021년 확정액 규모는 2020년 대비 9.6% 증가한 2,831억 원임. 2022년 확정액 규모는 2021년 대비 4.9% 증가한 3조 9,383억 원이고 2023년 확정액 규모는 2022년 대비 21.3% 증가한 약 4조 7,771억 원임. 2024년 ODA 확정액 규모는 2023년 대비 31.1% 증가한 6조 2,629억 원이고, 2025년 요청액 규모는 2024년 대비 8.5% 증가한 약 6조 7,972억 원임.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예산안을 구성한 2023년부터 ODA 증대 규모액과 비율이 급증함. 이에 〈3차 종합기본계획〉에서 2030년 목표로 설정한 2019년의 두 배인 6.4조 원 목표를 2025년 조

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 2022~2024년 ODA 자원 증대 목표 관련 내용

문서명	관련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ODA 총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종료되는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중견 공여국으로서 책무 및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등 감안해 ODA 규모 확대 기조 유지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5년 ODA 요구액 규모는 약 6조 7,972억 원 24년 6조 2,629억 원 대비 5,343억 원 증가 (8.5%)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4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31%) 확대, 3차 기본계획의 30년까지 6.4조 원 목표 조기 달성 예상 24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6조 2,629억 원 23년 4조 7,771억 원 대비 1조 4,858억 원 증가 (31.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3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4조 7,771억 원 22년 3조 9,383억 원 대비 8,388억 원 증가 (21.3%)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 - ODA 중 그린뉴딜 분야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DAC 평균(28.1%) 이상으로 확대 추진 22년 ODA 확정액 규모는 3조 9,383억 원 21년 3조 7,543억 원 대비 1,840억 원 증가 (4.9%) (21년 총 규모는 3조 7,543억 원 (3조 7,101억 원 의견이었으나, 예비비 및 사업 전용을 통해 442억 원 증액)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ODA 수요 급증 대비, 보건의료 ODA 핵심분야 중 하나로 선정, 규모 대폭 확대 - ODA 분야 예산은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 추세 유지, 정부의 확고한 ODA 확대 정책 의지 실현 (2019년 대비 2021년 ODA 예산(3.7조원)의 연평균 증가율 7.7%) 21년 ODA 확정액 규모 약 3조 7,543억 원 20년 확정액 3조 4,270억 원 대비 2,831억 원 증가 (9.6%) (21년 총 규모는 3조 7,543억 원 (3조 7,101억 원 의견)이었으나, 예비비 및 사업 전용을 통해 442억 원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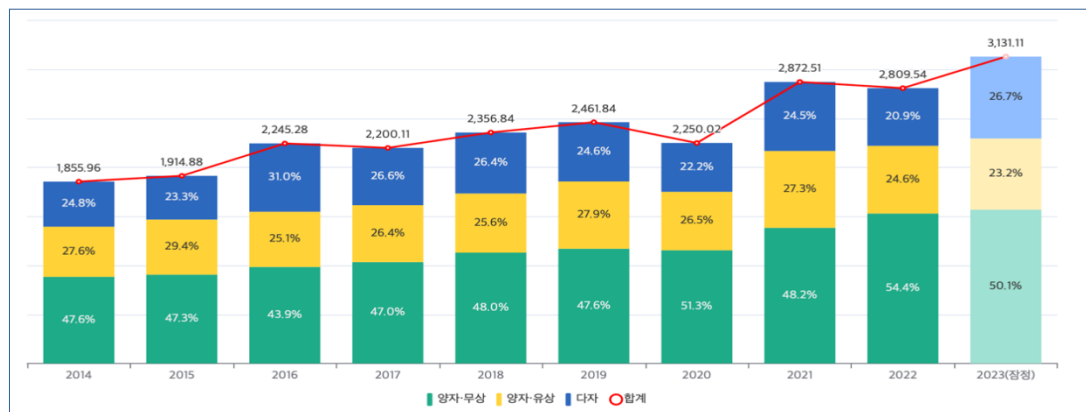
[표 22] <3차 종합기본계획>상의 자원 증대 목표 달성 여부

*환율 기준: ODA Korea 통계(각 연도별 OECD 고시환율) 기준

문서명	사업 개요상 ODA 확정액 규모	실제 달성액(집행액)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약 3조 7,543억 원 - 전년도(20년 3조 4,270억 원) 대비 2,831억 원 증가 (9.6%)	현재 정보 없음
'23년 국제개발협력	약 3조 9,383억 원	3,131.11 백만 달러(잠정) (약 4조

문서명	사업 개요상 ODA 확정액 규모	실제 달성액(집행액)
종합시행계획	전년도(21년 3조 7,543억 원) 대비 1,840억 원 증가 (4.9%)	8,781억 원) 실제 집행액 31.3억 달러 정도, 전년 대비 3.2억 달러(11.4%) 증가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약 4조 7,771억 원 - 전년도 (22년 3조 9,383억 원) 대비 8,388억 원 증가 (21.3%)	2,809.54백만 달러 (약 3조 6,289억 원) - 실제 집행액 28.1억 달러 정도, 전년 대비 0.6억 달러 (2.2%) 감소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약 6조 2,629억 원 - 전년도 23년 (4조 7,771억 원) 대비 1조 4,858억 원 증가 (31.1%)	2,872.51백만 달러 (약 3조 2,846억 원) - 실제 집행액 약 28.7억 달러, 전년 대비 6.2억 달러(27.7%) 증가 (OECD DAC 가입 후 최대폭)

[그림 1]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2021~2025) ODA Korea 통계상의 지원 실적



출처: ODA Korea 홈페이지

2) ODA 양·다자, 유·무상 비율

- 2021년 양자 ODA 중 유·무상 비율을 보면 2022년은 유상 36.2%, 무상 63.8%이고 2022년 양자 ODA 중 유·무상 비율을 보면 2022년은 유상 31.1%, 무상 68.9%임. 2023년은 유상 31.7%, 무상 68.3%임. 두 해 평균 유상 비율이 31%대이고 무상 비율은 68%대 임. <3차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상 대 무상 비율을 40:60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에 비해 무상이 다소 높은 비율임. 양자 대 다자의 비율을 보면 2021년은 75.5%대 24.5%임. 2022년은 79%대 20.9%이고 2023년은 73.3%대 26.7%임.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2023년 양자 ODA 비율이 약간 줄었음.

[표 23] 2022~2023년 양·다자, 유·무상 비율

연도	지원 실적 비율
2023년 (잠정)	- 전체 ODA 3,131,11백만 달러 - 양자 73.3%, 다자 26.7% - 양자 중 유상 31.7%, 무상 68.3%
2022년	- 전체 ODA 2,809.54백만 달러 - 양자 79%, 다자 20.9% - 양자 중 유상 31.1%, 무상 68.9%
2021년	- 전체 ODA 2,872.51백만 달러 - 양자 75.5%, 다자 24.5% - 양자중 유상 36.2%, 무상 63.8%

출처: ODA Korea 홈페이지의 내용을 발전대안 피다 평가팀이 재구성함.

3) 중점협력국 지원 비중

- 정부는 <3차 종합기본계획>에서 중점협력국에 양자 ODA의 70%를 투입하겠다고 밝힘. 실제로 2021년에는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72.3%를 2022년에는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1%, 2023년에는 79.3%, 2024년에는 81%를 배정했으며, <'25년 종합시행계획>에는 81%를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함.

[표 24] 2022~2023년 정책 문서상의 중점협력국 관련 내용

문서명	관련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수원국 발전 수준, 경제-외교 협력 실적 및 전망 등을 토대로 중점협력국 수를 24개국에서 27개국으로 조정 -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 투입 - 협력 성과와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신북방 국가 등 추가 - 선택과 집중 효과 위해 대륙별 거점 국가 지정 및 운용 - 국가별로 중점 추진 분야 및 이행계획 등을 포함한 중기 지원 전략 수립, 연도별 지침 마련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중점협력국에 대한 양자 ODA의 70% 이상 비율을 유지하되, 국별협력전략(CPS)상의 중점 지원 분야 중심으로 집중 발굴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중점협력국 사업이 70%가 되도록 중점 발굴, 신규 중점협력국 대상 사업 발굴 확대 및 유-무상 민간협력의 패키지 사업 기획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중점협력국별 지원 예산의 70%를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점협력 분야(교통, 수자원, 의료 등)에 지원

[표 25] 2022~2024년 중점협력국 자원 배분 결과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중점협력국 ODA 배분 목표
2024년	•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81%(유상 86.5%, 무상 71.7%) 지원 (다국가 사업 제외)
2023년	•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3%(유상 84.9%, 무상 71.1%) 지원 (다국가 사업 제외)
2022년	•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1%(유상 84.5%, 무상 71.0%) 지원 (다국가 사업 제외)
2021년	• 중점협력국 24개국 대상 약 72.3%(유상 78.1%, 무상 64.2%) 지원 (다지역, 미지정 제외)

4) 보건 분야 중점 지원

- ODA Korea 홈페이지가 제공한 ODA 사업 목록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는 보건 ODA 규모는 498.92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23.01%임. 2022년에는 282백만 달러이며, 17.2%임. 2023년에는 326.64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14.23%임.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와 비율이 축소되고 있음. 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 분야 ODA가 급증했다가 2022년부터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6] 보건 ODA 규모 및 비율 (2021~2023)

구분	2021	2022	2023
총액(백만 달러)	498.92(23.01%)	382.00(17.20%)	326.64(14.23%)

5) 그린, 디지털, 공공행정 ODA 확대

① 그린 ODA

- 그린 ODA의 경우 ‘관련 내용이 주요 (1차적) 목적인 경우’와 ‘관련 내용이 부수적 (2차적) 목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증여등가액을 합산함. 2021년에는 344.06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15.87%임. 2022년에는 451.96백만 달러이며, 20.35%임. 2023년에는 581.40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25.32%임.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와 비율이 증대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2021년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채택하고, <’22년 종합시행계획>에서 전략 과제로 ‘2.1.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2.2. 그린뉴딜 글로벌 협력 선도, 2.3. 상생발전의 그린뉴딜’, <’23년 종합시행계획>과 <’24년 종합시행계획>에서 전략 과제로 ‘3.1. 기후변화 대응 선도’를 설정한 것과 같이 그린 ODA에 집중하고 있는 노력의 결과임.

[표 27] 그린 ODA 사업 규모 및 비율 (2021~2023)

구분	2021	2022	2023
총액(백만 달러)	344.06(15.87%)	451.96(20.35%)	581.40(25.32%)

- 항목별 규모 평가는 리우 마커에 해당하는 지표(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사막화)의 세부 항목 중 “관련 내용이 주요(1차적) 목적인 경우”와 “관련 내용이 부수적(2차적) 목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들의 증여등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생물다양성과 사막화 항목은 2022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함.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 항목의 사업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대됨.

[표 28]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사막화’ ODA 사업 규모 및 비율 (2021~2023)

구분	2021	2022	2023
생물다양성 총액(백만 달러)	70.76(3.26%)	46.60(2.10%)	99.77(4.49%)
기후변화 완화 총액(백만 달러)	134.19(6.19%)	228.05(10.27%)	300.94(13.55%)
기후변화 적응 총액(백만 달러)	210.13(9.69%)	223.77(10.08%)	417.75(18.81%)
사막화 총액(백만 달러)	52.39(2.42%)	33.57(1.51%)	48.00(2.16%)

② 디지털 ODA

- 디지털 ODA 규모의 평가는 일반 디지털 ODA 항목과 융합 디지털 ODA 항목으로 양분화 됨. 일반 디지털 ODA 부분은 CRS 코드 기준 ‘220(통신)’에 해당하는 사업들임. 융합 디지털 ODA 부분은 CRS 코드 220번대를 제외한 사업들 중 디지털 요소가 동반되는 사업에 해당함. 선정 기준은 사업 내용에서 디지털과 연관된 키워드들인 ‘ICT’, ‘디지털’, ‘스마트’, ‘전산화’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함. 일반 디지털 ODA의 규모는 2021년에는 15.29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0.71%임. 2022년에는 29.99백만 달러이며, 1.35%임. 2023년에는 61.140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2.66%임. 융합 디지털 ODA의 규모는 2021년에는 79.62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3.67%임. 2022년에는 85백만 달러이며, 3.83%임. 2023년에는 109.75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4.78%임. 일반 디지털 ODA와 융합 디지털 ODA 항목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함.

[표 29] 일반 및 융합 디지털 ODA 규모 및 비율 (2021~2023)

구분	2021	2022	2023
일반 총액(백만 달러)	15.29(0.71%)	29.99(1.35%)	61.14(2.66%)
융합 총액(백만 달러)	79.62(3.67%)	85.00(3.83%)	109.75(4.78%)

③ 공공행정 ODA

- 공공행정 ODA는 CRS 코드 기준 '151번(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들임. 2021년에는 140.39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6.48%임. 2022년에는 140.15백만 달러이며, 6.31%임. 2023년에는 173.99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7.58%임. 총액과 비율 모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둘 다 증가함.

[표 30] 공공행정 ODA 규모 및 비율 (2021~2023)

구분	2021	2022	2023
총액(백만 달러)	140.39(6.48%)	140.15(6.31%)	173.99(7.58%)

6) 시민사회 협력 ODA 예산 비중 확대

- 시민사회 협력 ODA의 경우 CSO/NGO 부문과 민관협력(PPP) 부문으로 양분화됨. CSO/NGO 부문의 경우 사업실시기관 코드 210, 220, 230번대에 해당하는 사업들임. 2021년에는 45.30백만 달러이며, 2.09%임. 2022년에는 50.64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2.28%임. 2023년에는 67.44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2.94%임. 총액과 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31] 시민사회 CSO/NGO 자원 ODA 규모 및 비율 (2021~2023)

구분	2021	2022	2023
총액(백만 달러)	45.30(2.09%)	50.64(2.28%)	67.44(2.94%)

- 민관협력(PPP) 부문은 사업실시기관 코드 310번대에 해당하는 사업들임. 2021년에는 15.39백만 달러이며, 0.71%임. 2022년에는 17.06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0.77%임. 2023년에는 15.68백만 달러이며, 비율은 0.68%임. 총액과 비율은 2022년 증대했다가 축소됨.

[표 32] 민관협력(PPP) 자원 ODA 규모 및 비율 (2021~2023)

구분	2021	2022	2023
총액(백만 달러)	15.39(0.71%)	17.06(0.77%)	15.68(0.68%)

6.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의 민주적 추진

본 파트에서는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수립과 사업 실행 과정에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키는지 판단하고자 함.

1) 정책 형성 파트너

① 시민사회

- 정부는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협의와 소통의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있음. <3차 종합기본계획>은 중점 과제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를 설정하며, ‘범정부 대화 채널(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적 운영’을 제시함. <’24년 종합시행계획>은 ‘사업전략협의회(관계부처+공공기관+협회+시민사회 참여 사업 발굴 협의체)등 통해 정부(ODA)와 기업(CSR·임팩트 투자 등)·시민 사회(NGO 등)의 자원 및 역량을 결합한 시그니처 패키지 사업 발굴 확대’를 언급하며 시그니처 패키지 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 과정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있음을 밝힘. 또한 <’23년 종합시행계획>은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과제 공동 점검 등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내실화’,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를, <’22년 종합시행계획>은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적 운영’을 제시함.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은 ‘시민사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방향(안) 마련’을 언급함. 또한 <’21년 종합시행계획>은 ‘정부-시민사회 간 활동 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 정기 논의 등 협업 체계 구축, 범정부 대화 채널(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적 운영’의 내용을 명시함.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정리하면, 사업 발굴 과정과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국한해 시민사회를 정책 대화에 참여시킴.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이나 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과 같은 주제 및 분야별 전략 수립 등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함.

② 학계

-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학, 연구 기관 등 학계를 협의와 소통의 대상으로 설정함. ‘ODA 관련 정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시민사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 구축 추진’(<’23년 종합시행계획>), ‘학계, 학회,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활성화’(<’22년 종합시행계획,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등의 내용이 이를 보여줌.

③ 기업

- 정부는 <3차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CSR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및 정례 소통 플랫폼 마련'과 같이 정책 형성 파트너로서 기업을 언급함. 단, 이하 다른 정책 문서에서는 정책 형성 파트너로서의 기업에 대한 내용은 없음.

④ 지방자치단체

- 정부는 지자체와의 정책 협의나 소통을 강조함. '지자체별 해외 자매 도시(지역) 교류 활동과 중앙정부·공공기관 ODA 사업 및 기업·시민사회의 활동 상호 연계, 효율성 제고, 도시화 문제 해결 등 지자체의 행정 발전 경험을 ODA에 접목' (3차 종합기본계획), '정부-지자체 간 정기적 소통 및 협력 활성화' ('23년 및 '24년 종합시행계획), '지자체와의 협의체 운영' ('22년 종합시행계획) 등의 내용을 찾을 수 있음.

2) 사업 실행 파트너

① 시민사회

- 정부는 사업 실행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3차 종합기본계획>은 '사업지원 방식 혁신- 정부(유·무상)-시민사회-기업(해외투자) 활동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 관련 프로그램 확대, 시민사회 강점분야(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에 대한 협력 강화'와 같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제시함. '시민사회 예산 확대', '시민사회 현지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24년 종합시행계획), '시민사회 협력 예산 확대', '정부-지자체-국제기구-시민사회-기업 간 연계' ('23년 종합시행계획), '시민사회 협력 예산 비중의 확대', '시민사회 현장 전문성 반영한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 'ODA-시민사회 사업 연계' ('22년 종합시행계획),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풍부한 현지 활동 경험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취약계층 중점 지원, 정부-시민사회-기업 연계 가능 사업의 발굴 기획을 통해 패키지 ODA 지원' ('21년 종합시행계획), '시민사회 전문성 활용'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 (교육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시민사회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개발협력 외연 확대' (다자협력 추진전략) 등이 사업 수행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내용임.

② 학계

- 정부는 한국과 수원국의 대학 및 연구 기관 등 학계와의 사업 실행 파트너로서의 내용을 제시함. '수원국 현지에 있는 학계·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확대' ('24년 종합시행계획), '개발협력 외연 확대: 공공기관-대학 등과의 협업' ('23년 종합시행계획), '대학,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협력 수요에 대응'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등이 대표적인 내용임. 특별히 개발협력 외연 확대를 위해 학계와의 협력을

다수 언급하고 있음.

③ 기업

- 정부는 주로 기업을 사업 실행 파트너로서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함. 'ODA 전문 기업 육성 지원, 개발 컨설팅 등 전문기업 육성 지원, 국내외 ODA 조달 시장 기업 진출 위한 규제 혁신 등 기업의 ESG 경영과 ODA 연계 강화'('24년 종합시행계획), '기업 참여 프로그램 발굴 확대, 소셜벤처, 스타트업'('23년 종합시행계획), '중소·대기업 등과 협력 강화'('22년 종합시행계획), '민간기업의 CSR/CSV 활동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발굴 및 협력'('21년 종합시행계획), '우리 IT 기업과의 지속적 협력 기반 마련'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기업의 ODA 사업 과정에서의 기여를 확대, 기업의 ESG 공헌 활동과의 연계도 활성화' (농업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기업의 혁신적 기술 및 ESG 활동과 연계한 ODA 사업 발굴' (다자협력 추진전략), '우리 기업의 개도국 투자 개발형 사업 참여 촉진/최적화된 금융 지원 패키지 구성/대형 사업 발굴 및 사업성 제고 등 민간 참여가 가능한 사업 추진 지원' (민간분야 참여 전략) 등이 그러한 내용임.

④ 지방자치단체

- 정부는 사업 수행자로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제시함. 주 내용은 외연 확대, 역량강화 등의 내용임. '개발협력 외연 확대 -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컨설팅·교육, 워크숍 통해 지자체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역량 강화'('24년 종합시행계획), '지자체 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23년 종합시행계획), '지자체 ODA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역량 강화 지원'('22년 종합시행계획) 등이 그러한 내용임.

[표 33]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제도적 참여 내용 분석 (2021~2024)

문서명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 범정부 대화채널(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을 정례적 운영하고, 시행기관(KOICA·EDCF) 차원의 협의 채널 활성화 및 연계 (p.18) 〈사업 실행 파트너〉 • 사업 지원 방식 혁신: 정부(유·무상)-시민사회-기업(해외투자) 활동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기획을 통해 수원국 수요 효율적 대응 및 각 주체의 장점 활용 (p.16) • 전략목표 ‘함께하는 ODA’: 공공(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시민사회·기업)-연구기관(학계·연구소) 등 범국가적 협력 생태계 조성 통해 국내 개발협력 전 주체 협력 토대로 국제사회와 파트너십 (p.7) • 중점과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p.18) •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 관련 프로그램 확대, 시민사회 강점 분야(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에 대한 협력 강화 (p.18) • 현장 중심 개발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예산 확대 노력 지속 (실적은 40백만 달러로 양자 원조의 21% 수준) (p.18) • 시민사회 프로그램 다각화: 개도국 내 ODA 사업과 시민사회 사업 간 연계 추진 (p.18)	〈사업 실행 파트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ODA 연구 기반 확대 및 연구 결과의 개발협력 정책 반영 활성화 (p.20) •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개도국 내 유망 분야 ODA 사업 발굴·기획 (p.20) • 대학·학회 등의 조사 및 연구 활성화 지원 등 생태계 구축 (p.21) • ODA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개발 추진 예) 대학 및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통해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 (p.21)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 기업의 글로벌 CSR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및 정례 소통 플랫폼 마련, CSR과 ODA를 연계 (p.20) • ODA 관련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주기적 의견 수렴·지원, 국내외 민간 재단과 국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협력 방안 모색 (p.20) 〈사업 실행 파트너〉 • 인프라 지원 협업 체계 강화: 민간건설사 및 민자사업 경험 보유 공공기관과의 협업 확대 (예) 스마트 시티 사업 발굴 모델 (p.12) •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 혁신적 사업 모델 개발: 스타트업·소셜벤처 및 사회적 기업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우리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 (p.16) • 사업지원 방식 혁신- 정부(유·무상)-시민사회-기업(해외투자) 활동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기획을 통해 수원국 수요 효율적 대응 및 각 주체의 장점 활용 (p.16)	〈사업 실행 파트너〉 • 국내 개발협력 전 주체 간 연계·협력: 공공(정부·지자체·공공기관) - 민간(시민사회·기업) - 연구기관(학계·연구소) (p.7) •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p.20) • 지자체별 해외자매도시(지역) 교류 활동과 중앙정부·공공기관 ODA 사업 및 기업·시민사회의 활동 상호 연계, 효율성 제고 (p.20) • 도시화 문제해결 등 지자체의 행정 발전 경험을 ODA에 접목·지원 (p.20)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 사업전략협의회(관계 부처+공공기관+협회+시민사회 참여 사업 발굴 협의체)등 통해 정부(ODA)와 기업(CSR·임팩트 투자 등)-시민사회(NGO 등)의 자원 및 역량을 결합한 시그니처 패키지 사업 발굴 확대 (p.21) • 현지 시민사회단체(CSO) 대상 간담회, 교육, 동료 학습 등 통한 현지 파트너십 강화 추진 (p.30) • 시민사회 현지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정 참여 및 소통〉 • ODA 관련 공공기관 및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학술행사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주체간 정보 공유 활성화 (p.31) 〈사업실행 파트너〉 • 수원국 현지에 있는 학계·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확대 (p.31)	〈사업실행 파트너〉 • 파트너십 고도화: 시민사회 예산 확대 및 현지기업 지원 활성화 등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통해 ODA 전문 기업 육성 지원 (p.8) • 민간재원 활용 확대: 사업전략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ODA)와 기업(CSR·임팩트 투자 등)-시민사회(NGO 등)의 자원 및 역량을 결합한 시그니처 패키지 사업 발굴 확대, 민간의 개도국 민관협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 정부-지자체 간 정기적 소통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가 ODA 전략 내 사업 간 연계 및 통합적 추진 강화 (p.31) • ODA 전략·시책 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자체 ODA 통합 협의회, 지자체 ODA 워크숍 등 정례 개최 (p.31) 〈사업실행 파트너〉

문서명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
	공동 연구 및 학술회의 등을 통해 ODA 사업의 현장성 강화 노력 (p.30) 〈사업 실행 파트너〉 전략목표 ‘파트너십 고도화’: 시민사회 예산 확대(570억 원, 18.9% ↑) 및 현지 기반 기업 지원 활성화, 제도 개선 등 통해 ODA 전문 기업육성 지원 (p.8)		력(PPP) 사업 참여 확대 위한 EDCF 재원을 활용한 유망 사업 발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p.21) 전략 목표 ‘파트너십 고도화’: 시민사회 예산 확대(570억 원, 18.9% ↑) 및 현지 기반 기업 지원 활성화, 제도 개선 등 통해 ODA 전문 기업 육성 지원 (p.8)	- 중점 과제: 개발협력 외연 확대 -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p.31) - 컨설팅·교육, 워크숍 통해 지자체의 성과관리·자체 평가 역량 강화 (p.31) 희망 지자체 대상 민간 연구기관의 컨설팅 지원, ODA 실무교육, ODA 평가교육 등을 통해 전문 인력 육성 지원 (p.31) 25년도부터 정부 부처 제안 사업 심사 시 지자체 사업을 별도 카테고리 분류하여 심사 실시 (p.3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과제 공동 점검 등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내실화 (p.21) - 정부와 시민사회 간 의견 소통 강화 및 성과 공유 확산: ODA 관계기관·시민사회 공동 홍보/포럼,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민관협력 정책협의회 등 (p.14) 〈사업 실행 파트너〉 - 전략 목표 ‘파트너십을 고도화하는 ODA: 개발협력 전 주체(시민사회, 민간기업, 재단, 학계, 지자체)와 협력 확대, 파트너십 고도화 추진 (p.9) - 시민사회 협력 예산 확대를 통해 협업 기반 강화 (p.23) - 연계 및 패키지사업: 대규모 랜드마크형 민관 패키지 사업 발굴, 사업전략협의회 (국조실 주관)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국제기구-시민사회-기업 간 연계 등 유무상 및 민관 패키지 사업 추진, 중점협력국별 대표적 전략 패키지 사업 1건 이상 발굴 추진 계획 (p.30)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 ODA 관련 정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시민사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 구축 추진 (p.24) - 개발협력의 날(11.25) 계기 학계와의 공동 학술 행사 개최 등 학계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ODA 전략·정책 수립 과정에서 협력 강화 (p.24) 〈사업 실행 파트너〉 - 전략 목표 ‘파트너십을 고도화하는 ODA’: 개발협력 전 주체 (시민사회, 민간기업, 재단, 학계, 지자체)와 협력 및 협업 확대 (p.9) ‘개발협력 외연 확대’: 공공기관·대학 등과의 협업 (p.24)	〈사업 실행 파트너〉 - 전략 목표 ‘파트너십을 고도화하는 ODA: 개발협력 전 주체 (시민사회, 민간기업, 재단, 학계, 지자체)와의 협력 및 협업 확대 통해 파트너십 고도화 추진 (p.9) - 기업의 ESG 경영과 ODA 연계 강화: 민간 역량을 활용한 민관 패키지 사업 발굴 및 지원 체계 확립 (p.20) - 개발협력 민간부문참여(PSE) 전략 이행(ODA 사업 추진 과정 기업 지원 강화), 개발컨설팅 등 전문기업 육성 지원, 국내외 ODA 조달 시장 기업 진출 위한 규제혁신 등 (p.24) - 연계 및 패키지사업: 대규모 랜드마크형 민관 패키지 사업 발굴, 사업전략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국제기구-시민사회-기업 간 연계 등 유무상 및 민관 패키지 사업 추진, 중점 협력국별 대표적 전략패키지 사업 1건 이상 발굴 추진 계획 (p.30) - 민관협력사업: 사업 기획 단계부터 기업의 혁신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참여 프로그램 발굴 확대 (p.31)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 정부-지자체 간 정기적 소통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가 ODA 전략 내 사업간 연계 및 통합적 추진 강화 (p.24) - 지자체 ODA 통합협의회 정례 개최, ODA 시책 공유,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심사 시 지자체 사업 우대사항 적용 지속 (p.24) 〈사업실행 파트너〉 - 전략 목표: ‘파트너십을 고도화하는 ODA: 개발협력 전 주체 (시민사회, 민간기업, 재단, 학계, 지자체)와의 협력 및 협업 확대 통해 파트너십 고도화 추진 (p.9) - 중점과제: 개발협력 외연 확대 -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p.24) - 지자체 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p.24) - 대규모 랜드마크형 민관 패키지 사업 발굴, 사업전략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국제기구-시민사회-기업 간 연계 등 유무상 및 민관패키지 사업 추진 (p.30)
‘22년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적 운영 통해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학계, 학회,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 실행 파트너〉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지자체와의 협의체 운영 (p.34)

문서명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
종합시행계획	ODA-시민사회 사업 연계 예)본 사업(ODA)+사후관리(시민사회)/사업 발굴(시민사회)+본 사업(ODA) (p.28) 〈사업실행 파트너〉 - 중점과제 ‘시민사회 등 민관협력 공고화’ (p.28) - 시민사회 협력 예산 비중의 확대 추진 및 협력 예산 중 국내 및 현지 시민사회 역량 강화 예산도 확대 추진 (p.28) - 시민사회 현장 전문성 반영한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사업 다양화 및 확대 추진 (p.28) - 패키지 사업 기획 및 지원국 선정 시 사업전략협의회 (NGO,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하여 패키지 사업 실행력 제고 (p.23) - 정부의 ODA 정보공개 지침 마련->시민사회도 국제 기준에 맞는 정보공개 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 (p.28)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과제 지속 추진 (p.28) - 시민사회 참여하에 SDGs 국제동향 공유 및 이행 점검 (p.28) - 수원국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기여를 위한 개도국 현지 지역사회(현지 진출 국내기업, 현지기업, 시민사회 등)와 협력 강화 (p.29)	강화 및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활성화 등 ODA 외연 확대 (p.35)	(P4G)에 2022년 400만불을 공여, 우리 스타트업 등 P4G 파트너십 사업 참여 확대 (p.20) - 정부(유·무상 ODA) - 시민사회 - 기업(사회공헌 활동 등) 간 연계를 통해 각 주체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사업 기획 확대 (p.23) - 소셜벤처, 스타트업, 중소·대기업 등과 협력 강화 (p.29) -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CTS, IBS, IPS) 확대 추진 (p.29) - ESG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점을 감안, 개발협력 분야 민간부문 참여(PSE) 전략 수립을 통한 체계적 협력 기반 구축 (p.29) - 국제기구 조달시장 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애로 사항 점검 등 실시 (p.29)	〈사업실행 파트너〉 - 정보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사업공유 및 통합적 심사체계 구축, 중앙부처-지자체 간 소통 활성화로 상호 연계 기반 강화 (p.34) - 지자체와의 협의체 운영, 외교부와 행안부의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국가 주관 ODA 지원사업에 지자체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자체 ODA 활성화 추진 (p.34) - 지자체 ODA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역량 강화 지원 (p.34)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정책 결정과정 참여 및 소통〉 -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협력 프로그램 다양화,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활성화, 대국민 홍보, 세계시민교육 등 협력 확대 - 정부-시민사회 간 활동 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 정기 논의 등 협업 체계 구축 (p.15) - 범정부 대화 채널(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적 운영, 시행 기관 차원의 협의 채널 활성화 및 연계 (p.9)	〈사업실행 파트너〉 국내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 대학 수요 맞춤형 학과 신설·개편을 지원하고 전문대학 트랙 신설 추진 (p.22)	〈사업실행 파트너〉 - 기업의 CSV(공유가치창출)와 정부의 ODA 연계 (p.15) - 성공적 지역 방역경험 프로그램화 및 해외 자매도시 지원: 중소기업의 국제기구 ODA 사업 조달 참여지원 및 수원국의 민자사업 참여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너지 창출 (p.15) - 민간 기업 협력: 민간의 자원, 혁신기술, 비즈니스 전략 등을 활용한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해당 내용 없음

문서명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실행 파트너〉 •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풍부한 현지 활동 경험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취약계층 중점 지원 (p.13) • 정부-시민사회-기업 연계 가능 사업의 발굴 기획을 통해 패키지 ODA 지원 (p.15) •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 관련 프로그램 확대, 시민사회 강점분야(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에 대한 협력 강화 • 현장 중심 개발협력을 위한 시민사회협력 예산 확대 노력 지속 (실적은 40백만불, 양자 원조의 21.% 수준) • 시민사회 프로그램 다각화: 개도국 내 ODA 사업과 시민사회 사업 간 연계 추진 (p.24)		(CTS, IBS, IPS) 지속 추진 (p.24) • 민자 사업 참여 가능성 높은 기업은 유관기관 (KIND, MDB 등)과의 협업을 통해 PPP사업 발굴 추진 (p.24) • 민간 기업의 CSR/CSV 활동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p.24)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 ODA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분야-지역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방향(안) 마련할 것임 명시 〈사업실행 파트너〉 • 협력 기반 강화: 범정부 대화 채널 통해 협업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환경 조성, 제도 정비 등 정부-시민사회간 협력 공고화(‘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통해 기본 정책 이행과제 점검·보완 등 파트너십 내실화 추진) (p.7) • 시민사회 전문성 활용: 시민사회 강점분야 (인도적 지원이나 보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수원국 NGO와 협력 등 현장 중심 지원 확대 (p.7) • 국제개발협력 세부 추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ODA 참여 확대 방안, 시민사회와의 협업 로드맵, 다자협력 추진전략 등 구체적 대책 및 실행 계획 마련할 것임을 명시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 ODA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분야-지역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학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방향 마련할 것임을 명시 • 학계, 학회,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활성화 등 ODA 외연 확대	•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확대: 기업의 혁신적 기술 및 ESG 활동과 연계한 ODA 사업 발굴 통해 ODA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 (p.5) • 민간재원 활용 통한 사업규모 대형화: EDCF경협증진자금 연계 등 혼합금융을 통한 대형 인프라 개발 지원 촉진으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대 (p.5-6) • 전문가와 기업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 효율성 적극 활용 (p.6) • ODA 서비스 조달시장 : 자본력, 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스타트업, 민간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경쟁 → ‘기술어진 운동장’ 개선 (p.6) • 개발컨설팅 기업 성장 기반 조성 및 국내외 ODA 조달시장 기업 진출 지원, 현장 애로 규제혁신 (p.6)	해당 내용 없음

문서명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사업 실행 파트너〉 - 협력국 정부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에 대한 지지와 예산 확대를 위한 협의 지속, 시민사회를 활용한 현지인 인식 제고 등 (p.15) - 지역정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개인과 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성주류화에 우호적인 환경조성 (p.16)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사업 실행 파트너〉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성 제고 및 경제 협력 기반 마련: 기업 및 NGO 활동과 상호 연계한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성 제고 (p.16)	〈사업 실행 파트너〉 4차 산업혁명으로의 도약을 위해 ICT 첨단기술(AI, 빅데이터 등)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현장. 학계와 연계한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지원 (p.9) - R&D 연구의 거점이 되는 특성화대학을 설립하여 연구 기자재를 공급하고, 연구소·기업 등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행도 활성화 (p.9)	〈사업 실행 파트너〉 - 대형 경제 인프라 사업 발굴 추진: 아세안의 풍부한 개발수요에 기반한 대형 인프라 사업을 확대. 특히,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장대교량·공항·도시철도 및 교통 시스템 설계 분야 등의 사업을 적극 발굴 (p.8) - 데이터 기반의 도시 인프라 개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ODA 사업을 우리 기업의 민간 투자 등 후속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민간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 (p.8) - ICT 첨단기술 개발 지원: R&D 연구의 거점이 되는 특성화대학을 설립하여 연구 기자재를 공급하고, 연구소·기업 등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행도 활성화 (p.9) - ICT 산업생태계 조성: 국내 스타트업과 교류 및 정책 경험(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유 확대 (p.9) 기업의 사회공헌(CSR, ESG)과 상호 연계한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성 제고 (p.16) -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성 제고 및 경제 협력 기반 마련: 기업 및 NGO 활동과 상호 연계한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성 제고 (p.16) - 민관협력 사업의 성공 사례 축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향후 경제 협력 활성화를 뒷받침 (p.16)	해당 내용 없음

문서명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사업 실행 파트너〉 - 유·무상 연계를 통해 정책 컨설팅·시스템 구축·사후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를 통합 지원, 우리 IT 기업과의 지속적 협력 기반 마련 (p.15) 대학·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코딩 등 디지털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ICT 기반의 창업 인재도 양성 (p.16)	해당 내용 없음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사업 실행 파트너〉 - 정부 부처뿐 아니라, 대학,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 협력 수요에 대응 (p.3) - 현장 경험을 다수 보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 (p.10)	〈사업 실행 파트너〉 정부 부처뿐 아니라, 대학,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 협력 수요에 대응 (p.3)	〈사업 실행 파트너〉 - 정부 부처뿐 아니라, 대학,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 협력 수요에 대응 (p.3) 스타트업 등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개도국이 당면한 교육 현안 해소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p.10)	해당 내용 없음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사업 실행 파트너〉 -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ODA 사업 과정에서의 기여를 확대하고, 기업의 ESG 공헌 활동과의 연계도 활성화 (p.14) - 민관협의회, 민간 자금 공동 부담 등을 통해 민간의 기술과 재원을 활용한 ODA 사업 발굴, 기획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유도 (p.14) - 우리 농기계조합 등과 연계하여 전문 기술을 전수하고, ODA 사업 종료 후 경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에 기여 (p.14)	해당 내용 없음
민간의 개발컨설팅 참여 활성화 방안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사업 실행 파트너〉 -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및 한국 ODA의 질적 성장과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의 개발 컨설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필요 (p.1) - ODA 사업 개발 컨설팅 활용 확대 (p.8) (EDCF 다변화) EDCF F/S 지원 범위 확대 및 다변화 추진, 무상기관, MDB와 연계 강화를 통한 개발 컨설팅 활성화 추진 (p.8)	해당 내용 없음

문서명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발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자원 체계 구축: 전문가 등급제 개선, 전문교육 강화 (p.11)	
다자협력 추진전략	〈사업 실행 파트너〉 - 시민사회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개발협력 외연 확대 (p.3) - 다자협력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 확대,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 지원 (p.17)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및 시민사회 협의체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외교부-시민사회 정책 대화 등)에 기반, 우리 정부 정책 방향 및 시민사회 현장 활동 정보 공유 활성화 (p.17) - 국제기구와 협력 시 우리 시민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전문성 발휘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계기로 활용 (p.17)	해당 내용 없음	〈사업 실행 파트너〉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개발협력 외연 확대 (p.3)	해당 내용 없음
민간부문 참여 전략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소통〉 - 정부-기업 간 소통 확대 (p.11) 〈사업 실행 파트너〉 - 복합금융 지원 확대: 고양허성 차관인 EDCF에 EDPF와 수출금융을 연계하는 복합금융 확대, 우리 기업의 개도국 투자 개발형 사업 참여 촉진/최적화된 금융지원 패키지 구성/대형사업 발굴 및 사업성 제고 등 민간 참여가 가능한 사업 추진 지원 (p.12) - 민간부문 직접 지원 및 지원 방식 다변화 (p.13)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ODA 연계, 적극 지원 (p.17) - 민간 기업 참여 환경 조성 (p.18) - 정부-기업 간 소통 확대 (p.11)	해당 내용 없음

7.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

1)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내용 변화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인 2021~2024년 4년간의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을 보면 최종 비전으로 설정한 내용에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핵심적 내용은 변함이 없음. 이는 어느 정권인지에 관계없이 〈3차 종합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비전의 영향임.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정책 방향이 적용되었던 2021년과 2022년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윤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이 반영된 2023년부터 ‘인도주의적 가치,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공존과 상호번영, 파트너십을 고도화’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
- 중점 과제 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2개로 동일하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제시되지 않은 ‘인도적 지원’의 내용이 2023~2024년 2년간 제시됨.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적 지원, 취약국, 디지털, 개발협력 자원,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 대외 정책 정합성, 국제사회 협력, 민간 부문 파트너십, 개발협력 외연 확대’는 과제로 일관성 있게 설정됨. 반면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는 코로나19가 종료된 2023년에만 과제로 설정됨. ‘기후변화 대응’은 2023년과 2024년 과제로 설정됨. ‘위기 대응 및 회복 지원’은 2024년 과제로 설정됐는데,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2023년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대응의 영향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 및 회복 지원’은 2024년에만 과제로 설정됨.

[표 34]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서상의 비전, 전략 목표, 중점 과제의 변화 (2022~2024)

구분	2021	2022	2023	2024
비전	글로벌 가치 실현에의 기여 및 상생의 번영 추구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전략 목표	1. 중견공여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 2. 코로나19 대응 전략적 ODA 추진 3.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와 공조 4. 주요 정책 기조 성과 도출 및 사업 효과 제고 5. 개발협력 외연 확대 및 책무성 증진	1. 포용적 ODA 2. 상생하는 ODA 3. 혁신적 ODA 4. 함께하는 ODA 〈전략과제〉 1. 코로나19 위기 극복 2. 기후변화 대응 선도 3. 개발협력 혁신 다각화 4. 파트너십 선진화	1.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ODA 2.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는 ODA 3.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번영을 위한 ODA 4. 파트너십을 고도화하는 ODA	1.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2.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3.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번영 4. 파트너십 고도화
중점 과제	1.1. 보건의료 ODA 역량 집중 1.2. 개도국 경제·사회	1.1. 보건의료 대응 체계 구축 1.2. 인도주의 실현 강화	1.1. 인도적 지원 확대 1.2. 취약국 식량 위기 극복 지원	1.1. 인도적 지원 확대 1.2. 위기 대응 및 회복 지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회복력 강화 1.3. 글로벌 협력 선도 및 상생 발전의 생태계 구축 2.1. 국제사회 SDGs 이행 지원 2.2.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2.3. 취약국/최빈국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3.1.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 정책·전략과 사업 간 연계 3.2. 우리 강점 분야 지원 확대 3.3.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 4.1. 민관협력 강화 및 협력 플랫폼 확장 4.2. ODA 사업관리 및 운영 방식 개선 4.3. ODA 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공개 및 홍보	1.3. 경제 회복력 증진 2.1.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2.2. 그린뉴딜 글로벌 협력 선도 2.3. 상생 발전의 그린뉴딜 3.1. 디지털 뉴딜 ODA 지원 3.2. 프로그램 혁신 및 재원 다양화 3.3. ODA 효과성 책무성 제고 4.1. 시민사회 등 민관협력 공고화 4.2. 양자 다자 개발협력 고도화 4.3.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	1.3.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2.1.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2.2. 개발협력 재원 규모 확대 다각화 2.3.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3.1. 기후변화 대응 선도 3.2.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 3.3.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4.1. 국제사회 협력 증진 4.2. 민간부문 파트너십 강화 4.3. 개발협력 외연 확대	1.3. 취약국,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2.1.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2.2. 개발협력 재원 다각화 2.3. 개발협력 프로그램 다변화 3.1. 기후변화 대응 선도 3.2. 대외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3.3.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 4.1. 국제사회 협력 증진 4.2. 민간 파트너십 강화 4.3. 개발협력 외연 확대

2) 정권 주기와 종합기본계획 주기 일치의 필요성

- 〈3차 종합기본계획〉의 실행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임. 그런데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됨.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발표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 목표 그리고 중점 과제를 제시했음. 이 같은 윤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임기가 마치는 2027년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 문서로 작동할 〈4차 종합기본계획〉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 그러나 제21대 대선 이후 등장할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시행 방안을 제시할 것임. 이전 사례를 판단하면, 2026년 시작될 〈4차 종합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작동은 2026년과 2027년 상반기로 그칠 것임. 이에 5년간의 정권 임기와 5년 주기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시작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매 5년마다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표 35]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정권 변화 시기 비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2035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정책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정책					제5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정책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새 정부				새 정부

8.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 지지 변화

-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의 지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국민 공감 및 지지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3차 종합기본계획>은 ‘국민 관심 증대: 통합적 ODA 추진 기반 공고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기대 확산, 국민 지지 확보’라는 내용을 제시하지만, 국민 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함. 그 외 연도별 시행계획은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 세부적으로는 ‘대국민 인식 제고: 정보 공개 확대 및 투명성 제고, ODA 홍보 활성화’ (‘24년 종합시행계획), ‘국민 공감을 토대로 한 ODA 추진 병행 필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 ODA 콘텐츠 확산·대국민 홍보 확대’ (‘23년 종합시행계획),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필요, ODA 홍보 활성화’ (‘22년 종합시행계획), ‘홍보 콘텐츠의 국민 공감도 제고,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본격 추진’ (‘21년 종합시행계획), ‘국민 지지: ODA 규모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ODA 추진을 위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 확보가 중요하나, 인지도 및 지지도는 정체, 홍보 강화’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등과 같은 내용이 제시됨.
- 이 같은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홍보 위주로 되어 있으며 정보 공개 및 투명성과 콘텐츠 확산 정도가 제시되고 있음. 국민들이 ODA를 더 많이 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36]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상의 국민 지지 관련 내용 (2021~2024)

연도별 계획	국민 지지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국민관심 증대: 통합적 ODA 추진기반 공고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기대확산 → 기업의 해외진출, 투자·무역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연대·협력 선도 등 (p.6) • 효과적 ODA: ODA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국민지지 확보,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p.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대국민 인식 제고: 정보공개 확대 및 투명성 제고, ODA 홍보 활성화 (국내외 언론, SNS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개발협력 주관을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들이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우리국민·수원국 관계자들이 함

연도별 계획	국민 지지 내용
	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계기로 확대 기획, ODA 백서 발간 (p.37)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국익 및 실용의 국정운영 원칙 토대로 ODA 내실화 통한 상생 국익실현 및 국민 공감을 토대로 한 ODA 추진 병행 필요 (p.4) • 19년 대비 21년 대국민 ODA 인지도는 소폭 상승(62→64%), 지지도는 하락(81→76%) (p.4) • 대국민 인식 제고 : ODA 사업 책무성 제고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보공개지침 마련·이행, IATI 정보공개 항목 확대 등 투명성 제고, ODA 통합누리집 개편, 통합 정보 포털 개선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화, 통합홍보 TF 개최 통해 홍보실적 점검 및 협업방안 등 논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 ODA 콘텐츠 확산·대국민 홍보 확대, 신규 ODA Korea 통합 BI 활용 (p.26)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강화된 ODA 통합추진체계를 토대로 ODA의 효율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필요 (p.11) • 신남방·신북방 등 대외정책 성과 배가, 경제협력 확대 등 상생의 국익 실현을 통해 ODA 확대에 대한 국민의 공감·지지 확보 필요 (p.11) • ODA 홍보 활성화: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 중인 홍보 상호 연계 등 통합홍보 내실화, '개발협력의 날(11.25)' 운영 등 / 연령별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토대로 홍보영상 제작 및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ODA 인식증진 및 홍보 효과성 제고 (p.34)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높으나, 반대 여론도 상존하는 바,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 제고 노력 및 성과 홍보 병행 필요 (p.3) • 국민의 80% 이상이 ODA 제공에 찬성하나, 반대 여론(19%) 중에는 국내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45.8%) 차지('19년 ODA 국민인식조사') (p.3) • ODA 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공개 및 홍보 강화: 홍보 콘텐츠의 국민 공감도 제고,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본격 추진 등 (p.26)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홍보강화) 통합홍보 제도화, 세대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및 수원국별 맞춤형 메시지 발굴로 우리 ODA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 (p.7)

- 그러나 정부가 진행한 <ODA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보면 ODA 인지도는 2016년 40%대에서 2019년과 2021에는 60%대로 상승했으나, 2024년 50%대로 하락함. 그런데, ODA 지지도는 2024년 77.8%로 2021년 76%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2016년 80%, 2019년 81.3%보다 하락했음. ODA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4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61.8%로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2019년 20.9%에서 2021년 12.6%로 유의미하게 하락했다가 2024년 19.4%로 소폭 상승함.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9년 17.1%에서 2021년 19.4%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4년 18.8% 소폭 하락함. 정부 ODA의 효과성에 대해 '도움 된다'는 의견은 2019년 90.3%로 이전보다 상승했으나, 2021년 86.1%, 2024년 79.1%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ODA 정보 접근 경험에 대한 응답은 2024년 24.6%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 정리하면 2024년 결과 ODA 규모 적정성에 대한 ‘축소’ 의견(-0.6%P)과 ODA 지지도(+1.8%)는 비슷한 규모로 유지됐음. 그러나 ODA 인지도(-14.3%P), ODA 효과성(-7%P), ODA 정보 접근(-4.9%P), ODA 규모 적정성에 대한 ‘적절’ 의견(-4.5%P)은 주목할 정도로 하락했음. ODA 규모 적정성 ‘확대’ 의견(+6.8%)은 증대했음.

[표 37] ODA 국민 인식 조사 주요 결과 비교

구분	2016년 연구 결과	2019년 연구 결과	2021년 연구 결과	2024년 연구 결과
ODA 인지도	47.2% *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62% * 2012-2016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 그러나 2017년 조사 이후 60% 수준을 유지함	64.3%	50.0%
ODA 지지도	80% * 그러나 ‘적극 찬성’ 응답도 감소 추세	81.3%	76% * 2018년 소폭 상승 이후로 다시 하락세	77.8%
ODA 규모 적정성	적절 63.2% 확대 12.5% 축소 24.3%	유지 62.1% 확대 20.9% 축소 17.1%	유지 66.3% 확대 12.6% 축소 19.4%	유지 61.8% 확대 19.4% 축소 18.8%
정부 ODA 효과성	도움 된다 80.5%	도움 된다 90.3%	도움 된다 86.1%	도움 된다 79.1%
ODA 정보 접근 경험	있다 35%	있다 30.2% * 대외 원조 정보 경험 등락 반복	있다 29.5% * TV 하락, 인터넷 상승세	있다 24.6%

출처: ODA Korea에 게재된 국무조정실의 2016년, 2019년, 2021년 및 2024년

ODA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전대안 피다 평가팀이 정리함.

- ODA 제공 찬성 이유 1위 의견으로 2016년, 2019년, 2021년 동일하게 ‘과거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와 2위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2024년도 조사 결과는 1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2위 ‘국제사회의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때문에’로 변화가 있음. 반대 이유는 1위 ‘우리나라는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2016년, 2021년),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2019년, 2024년)로 나타남.
-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경험과 경제 상황’ 등 ‘한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즉, 한국 ODA의 이유는 한국 내부 상황과 연결되고 있음.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24년의 찬성 이유가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로 달라져서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임.

[표 38] ODA 국민 인식 조사 결과상 대외 원조 제공 찬반 이유 비교

구분	2016년 연구 결과	2019년 연구 결과	2021년 연구 결과	2024년 연구 결과
찬성 이유	1위: 과거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37.4%) 2위: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26.4%) → 과거 경제적 빈곤을 경험한 당사국으로서, 국제 평화나 외교보다는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저개발국 문제 해결에 중점	1위: 과거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42.5%) 2위: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2.3%)	1위: 과거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28.6%) 2위: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23.6%) 3위: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에 (16.1%) -- 증가	(복수응답) 1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60.1%) 2위: 국제사회의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38.7%) 3위: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36.5%)
반대 이유	1위: 우리나라는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41.5%) 2위: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7%) -- 증가 추세	1위: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45.8%) -- 2012년 조사 초기에 비해 응답 비율 증가 2위: 우리나라는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문에 (38.7%)	1위: 우리나라는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35.6%), 2위: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4.5%) 3위: 원조가 개도국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4.5%)	(복수응답) 1위: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서 (63.9%) 2위: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아서 (56.4%) 3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37.6%)

출처: ODA Korea에 게재된 국무조정실의 2016년, 2019년, 2021년 및 2024년

ODA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전대안 피다 평가팀이 정리함.

1. 주요 평가 결과

1)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가치 지향성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

-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중기 문서로 2021년 채택한 <3차 종합기본계획>은 글로벌 가치와 상생의 국익을 추구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가를 강조해 ‘국익’은 제외됨. 그러나 2022년 이후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비전은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제시해 국익을 강조함.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국익>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부가 발간한 정책 문서들은 구체적으로 국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기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ODA를 통해 국익 실현, 증진,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3차 종합기본계획>이 제시한 ‘상생의 국익’이 몇몇 부서들에게는 기업 진출과 같이 단기적이고 상업적인 측면의 이익으로만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협력대상국의 성격>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부가 설정한 제3기 중점협력국은 가장 협력이 필요한 최빈국보다는 하위중소득국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함. 최빈국에 대한 지원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2)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협력대상국 발전 방향

<국제개발협력이 성취하고자 하는 협력대상국의 발전>

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장기적 목표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부가 발간한 정책 문서들은 협력대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특별한 발전의 모습 즉, 발전상을 제시하지 않음. 인도주의, 경제·사회 발전,

기후변화 등 현재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② 한국 ODA의 중점 분야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부는 특정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와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중심으로 ODA를 집행하고 있으며, ‘보건’(12.9%)과 ‘운송 및 창고’(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치 부문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는 항목인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의 비중은 매우 낮음. 이 중에서는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가 절대 다수(48.18%)이며,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0.82%), ‘인권 감시 및 교육’(1.47%),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0.17%) 등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③ 경제 개발의 성격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부는 초기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경제 성장을 지원했으며, 시간이 지나며 일반적인 경제 위기 극복,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설명함.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과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에 적합하게 경제 회복력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여성 경제력 강화 지원, 농업 기반 경제 발전 및 성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④ 한국 기업 진출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책 문서는 ODA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수출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드러냄. 구체적으로 ‘기업의 대형 인프라 수주 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과도 적극 연계’, ‘기업의 판로·시장 확보에도 기여’와 같이 ODA를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사용함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기업진출 및 투자·교역 확대 등 협력의 기틀 마련’, ‘기업의 해외진출도 장려’, ‘기업의 개도국 내 활동기반 조성 기여’,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확대’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환경 조성, 기회 확대 등 간접적 지원에도 ODA가 활용됨을 알 수 있음.

⑤ 한국 봉사단의 목적·목표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정부가 제공하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단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한국’을 위한 것으로 기획되어 실행되고 있음. 청년이 주로 참여하는 봉사단이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으로 ‘전문가로의 성장, 활동 경험 제공 및 취·창업에 대한 기회’를 제시함. 그러나 해외 봉사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세계시민의식이나 글로벌 마인드, 개도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내용은 거의 부재함.

3)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방식

〈비구속성〉

- ODA 비구속성과 관련하여, 2021년 집행한 무상 ODA의 비구속성 비율은 86.2%이고, 2022년 집행한 무상 ODA 중 비구속성 비율은 목표치인 95%에 근접한 88% 수준임. 하지만 유상 ODA의 비구속성 비율은 2021년 54.1%, 2022년 46.3%로 매우 부족한 수준임. 2023년 무상 ODA 시행 부처 및 기관 중 4곳에서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100%이고, 그 외 4개 기관의 구속성 비율도 40~80%대 정도로 상당히 높음. OECD DAC도 동료 검토를 통해 유상 ODA의 비구속성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강조되는 ‘국익’ 추구의 영향으로 유상 ODA를 통한 한국 기업의 이익 확보가 강조될 수 있으며, 이는 유상 ODA의 비구속성 비율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4) 인류 공동의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찰적 접근

〈불평등 및 부정의 완화 노력〉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인 2021~2024년 정부가 발간한 국제개발협력정책 문서에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매우 드물게 제시되고 있음. 〈3차 종합기본계획〉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교육·보건·사회안전망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개도국 내 사회 불평등 해소 기여’를 언급하고, 〈’21년 종합시행계획〉은 정책 추진 방향으로 ‘수원국 내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5P 가치 추구’ 정도를 제시하는 정도임. SDGs가 불평등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불평등 해소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 문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음.

〈기후위기 완화 노력〉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발표된 정부 정책 문서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이슈에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대응 영향체계 보완’과 같은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함. 기후위기와 불평등, 취약성 해소, 빈곤 퇴치 등과 같은 이슈를 연결하지 못함. ODA 시행 부처들은 ‘기후재원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개도국 기후재원 조성 능력 배양’, ‘중남미 소농의 기후위기 대응’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 분야/주제별 전략에서도 ‘기후적응력 농업 기술 개발·전수, 기후탄력적 농촌인프라 확충’, ‘ICT를 활용한 기후대응·적응 역량 강화’ 과

같은 내용을 제시함.

〈협력대상국 민주주의 발전 지원 내용〉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개도국의 민주주의 지원에 대해 관심이 매우 적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정도임.

〈협력대상국의 다원적 발전 지원〉

① 협력대상국 시민사회 지원 내용

- 정부는 파트너십의 주 대상으로 수원국 NGO와의 협력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적음. 예산,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국내·현지 시민사회 역량 강화 예산도 확대 추진, 수원국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기여를 위한 개도국 현지 지역사회(현지 진출 국내기업, 현지기업, 시민사회 등)와 협력 강화’, ‘수원국 NGO와의 협력 등 현장 중심 지원 확대’가 전부임. 2019년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채택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

② 협력대상국 취약층 고려 내용

- 정부가 제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문서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구체적인 집단과 개념이 정립되지 않음. 정책 문서들에서는 여성·아동·난민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여기에 장애인·노인이 추가로 제시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로 규정하고 있어,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호한 해석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시혜적 성격을 가중시킬 수 있음. 또한 협력대상국의 수도와 지방 간 지역 격차를 고려한 취약층에 대한 언급이 부족함.
- 개발협력 사업을 실행하는 각 부처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상으로서의 여성 사업 또는 목적으로서의 여성 사업임. ‘개도국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 역량강화 지원’ (여성가족부), ‘대상별(장애인·노인·취약계층 등) 정책수립 지원’ (보건복지부), ‘해사 친환경·해양디지털 여성 역량강화 사업’ (해양수산부), ‘서자바주 취약계층 여성 대상 직업훈련 및 취·창업 교육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여성가족부) 등이 그 내용임. 권역, 주제별 전략 문서도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ICT와 관련한 접근을 제시하고 있음. ‘지역 내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기초보건 제공, 모자·아동보건문제 개선, 여성 청소년 대상 교육기회 확대’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학교 밖 아동, 저개발국 학업중단 아동, 여성, 장

애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 대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분야 개발협력추진전략),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 등을 다자협력 전반의 기본 원칙’ (다자협력 추진전략),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 디지털 교육, 도서산간 지역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등이 그 내용임.

5)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ODA 자원 배분 목표 달성

〈자원 증대 및 배분 목표 달성〉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중 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예산안을 구성한 2023년부터 ODA 증대 규모액과 비율이 급증함. 〈3차 종합기본계획〉은 당초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 규모의 두 배인 6.4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미 2025년에 이 수치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2021~2023년 3년간 양자 ODA 중 유·무상 비율은 유상 비율이 평균 31~36%대, 무상 비율은 평균 63~68%대로 나타남. 〈3차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무상 비율을 40:60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목표에 비해 무상이 다소 높은 결과치임. 양자 대 다자의 비율을 보면 2021~2024년 3년간 양자 비율은 73~75%이고, 다자 비율은 20~26%임. 정부는 중점협력국에 양자 ODA의 70%를 투입하겠다고 밝힘. 실제로 2021년 24개국 대상 72.3%, 2022년 27개국 대상 약 79.1%, 2023년에는 79.3%, 2024년에는 81%를 배정했으며, 2025년 종합시행계획에는 81%를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함.
- 〈3차 종합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보건 ODA 규모를 증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498.92백만 달러에서 2022년 382백만 달러로 감소함. 그린 ODA는 2021년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채택한 이후, 실제로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규모와 비율이 증대됨. 리우 마커에 해당하는 지표인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사막화의 경우, 생물다양성과 사막화 항목의 지원 규모는 2022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함.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 항목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대됨. 디지털 ODA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 디지털 ODA와 융합 디지털 ODA 항목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함. 공공행정 ODA의 경우 총액과 비율 모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둘 다 증가함.
- 〈3차 종합기본계획〉은 시민사회와의 ODA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CSO/NGO와의 협력에 대한 예산 규모는 총액 규모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대함. 민관협력(PPP) 분야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총액과 비율이 증대했으나 2023년 소폭 감소함.

6)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의 민주적 추진

-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시민사회와 학계를 참여시키거나 소통하며, 사업 수행 파트너로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설정함. 학계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협력 외연 확대를 위한 대상으로 규정됨.
- 시민사회에 대해서 정부는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협의와 소통의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사업수행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정부는 사업 발굴 과정과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국한해 시민사회를 정책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이나 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과 같은 주제 및 분야별 전략 수립 등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함.
- 정부는 대학, 연구 기관 등 학계를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협의와 소통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사업 수행 파트너로서의 내용을 제시함. 특별히 개발협력 외연 확대를 위해 학계와의 협력을 다수 언급하고 있음. 정부는 주로 기업을 사업 수행 파트너로서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함. 정부는 지자체와의 정책 협의나 소통을 강조하고 사업 수행자로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제시함. 주 내용은 외연 확대, 역량 강화 등의 내용임.

7)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내용 변화〉

-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 4년(2021~2024)간의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을 보면 최종 비전으로 설정한 내용 중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핵심적 내용은 변함이 없음. 이는 정권에 관계없이 3차 종합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비전의 영향임. 중점 과제 수는 2021년부터 2024년 까지 12개로 동일하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제시되지 않은 ‘인도적 지원’의 내용이 2023~2024년 2년간 제시됨.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적 지원, 취약국, 디지털, 개발협력 재원,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 대외 정책 정합성, 국제사회 협력, 민간 부문 파트너십, 개발협력 외연 확대’는 과제로 일관성 있게 설정됨.

〈정권 주기와 종합기본계획 주기 일치 필요〉

- 5년 주기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5년 주기의 정권 주기가 서로 맞지 않아 정책 문서 작성 및 활용 과정에 비일관성과 비효율성이 존재함. 〈3차 종합기본계획〉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임.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발표해 종합기본계획 시행 2년 차에 새

로운 비전과 전략 목표, 중점 과제를 발표했음. 윤 정부 임기 3년차인 2026년부터 시작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기간에 제21대 대선이 치러지고, 2027년 등장할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임. 이를 근본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임.

8) 한국 ODA에 대한 국민 지지

-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의 지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국민 공감 및 지지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ODA 규모 적정성에 대한 ‘축소’ 의견과 ODA 지지도는 비슷한 규모로 유지됐으나, ODA 인지도, ODA 효과성, ODA 정보 접근, ODA 규모 적정성에 대한 ‘적절’ 의견은 주목할 정도로 축소됐음. ODA 규모 적정성 ‘확대’ 의견은 늘어났음.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경험과 경제 상황’ 등 ‘한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즉, 한국 ODA의 이유는 한국 내부 상황과 연결되고 있음.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24년의 찬성 이유가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로 달라져서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임.

2. 정책 제안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가치와 협력대상국 성격>

- 첫째, 정부는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설정함에 있어 기후위기, 보건 위기, 불평등 심화, 인도적 위기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보편적인 가치를 더욱 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둘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계획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비전으로 제시된 ‘상생의 국익’ 개념을 구체화해야 함. ODA가 단기적인 상업적, 외교적 국익 추구의 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인권과 평화, 빈곤 퇴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추구가 한국의 국익임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또한, 국익이 외교 및 상업적 해석을 넘어 국내 다양한 부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와 학계가 참여하는 ODA와 국익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셋째, 가장 지원이 필요한 최빈국 중심으로 ODA를 제공해야 함. 국가별 ODA 배분에 있어 SDGs의 중심 가치인 ‘Leave No One Behind’의 원칙을 중심에 두며,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이해로 인해 가장 협력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함. 전 세계적으

로 최빈국에 대한 원조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⁸⁾, 구체적으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최빈국에 한국 ODA의 50% 이상을 배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제4기 중점협력국 설정 시에도 최빈국을 전체 50% 이상 배정할 것을 제안함.

〈국제개발협력이 성취하고자 하는 협력대상국의 발전〉

- 넷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협력대상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 즉 발전의 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는 당면 과제에 관한 대응책 제시뿐 아니라 발전의 주체와 주요 가치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하지만, 발전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발전 모델만을 확산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임.
- 다섯째, 정부는 협력대상국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치 분야 지원을 증대해야 함. 정부는 현재와 같이 사회, 경제 분야 중심의 지원을 유지하되, 정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증대해야함.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여섯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기여할 협력대상국의 경제 부문 발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현재와 같이 경제 성장,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이라는 일반적인 내용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상, 방식, 분야 등의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일곱째, 정부는 ODA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직·간접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의 본연적 목적인 빈곤 퇴치, 인권 향상 등 보편적 가치의 추구하고 상충하거나, 때로는 보다 상위 목적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기업이 가지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협력대상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ODA를 추진해야 할 것임.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ODA를 개도국 발전이 아닌 첫 번째 목적으로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또한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준수를 통해 현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ODA를 해당국 고용보험, 직장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 체제 정비, 해당국 근로감독관 교육 및 양질의 노동을 촉진에 활용해야 함. 또한 ODA 참여기업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현지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영향 평가 및 관리, 신고 메커니즘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정부는 청년층이 주로 참여하는 봉사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국이 아닌 협력대상국의 발전에 대한 기여로 설정해야 함.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설정해야 함. 이러한 바탕 위에 청년들의 전문가로의 성장 및 취·창업이라는 목적이 의미를 가질 것임. 그리고, 봉사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진입 및 연계를 추구한다면, 이들의 파견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중도 하차 비율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협력대상국 협력 방식〉

아홉째, 정부는 유상 ODA의 비구속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현재의 목표 45%를 상향하여 설정해야 함. 무상 ODA 수행 기관 중 구속성 비율이 높은 기관들의 비구속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함. 이를 위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행 체계에서 비구속성 비율을 총괄하는 기관은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인류 공동의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성찰적 접근: 불평등, 기후위기, 민주주의, 다원적 접근 중심〉

열째,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불평등 해소를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 함. 그리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열한째, 정부는 친빈곤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협력대상국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함. 한국보다 훨씬 낮은 협력대상국의 탄소 배출 현황, 그리고 가뭄, 홍수, 기온 상승 등이 빈곤과 강제 이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불평등과 취약성 완화, 빈곤퇴치의 관점에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기후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열둘째, 정부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협력대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실행해야 함. 구체적으로, 〈4명차 기본계획〉 기간 중 ‘한국의 개도국 민주주의 증진 지원 ODA 전략(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또한 〈인태전략 이행계획〉에서 명시한 권역 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1억 달러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

열셋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에서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다 진지하게 인식해야 함.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현지화(localization)가 가지는 중요성, 현지 생산 지식의 가치, 상호 학습의 잠재력 등을 고려해,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하고, 예산을 반영해 이를 실현할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실행해야 함.

열넷째, 정부는 현재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난민, 빈곤층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파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함. 이를 위해 2017년 수립한 <취약국 지원전략>을 현재 상황에 맞게 확대·개편하여 취약국·취약계층 지원으로 구성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전략이나 지원 방안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담겨야 함.

열다섯째, 2024년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을 전 ODA 수행 부처와 기관 및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교육, 점검 등을 포함한 방안을 구성해야 함. 또한 기존 KOICA에서 발간한 성평등 전략 및 지침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한국 국제개발협력 ODA 자원 배분 목표 달성>

열여섯째, 정부는 이미 설정한 ODA 규모 목표를 달성했고, 양·다자 비율, 유·무상 비율도 목표와 크게 어긋나지 않지만, ODA 규모 확대 기조가 다른 대외·정치·경제·사회적 이유로 변경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전 부처 수준의 약속을 추진해야 함. 특별히 ODA/GNI 비율 제고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예산은 국제 수준을 고려해 현재보다 확대해야 함.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의 민주적 추진>

열일곱째, 정부는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특히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수준의 소통이 아닌, 정책 수립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할 것임. 그 범주는 각 주체 관련 정책(예: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정책)을 넘어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 및 분야별 전략 수준까지로 확대해야 함. 또한 사업 실행 파트너로서 각 주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

열여덟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기간을 정권의 주기와 맞추어서 정권과 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바탕으로 정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시작 시기를 2026년에서 새로운 정권의 정책 철학이 반영되는 2028년으로 2년 늦추어 2028~2032년으로 설정하고, 2026~2027년 2년은 현재의 〈3차 종합기본계획〉 및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음.

〈한국 ODA에 대한 국민 지지〉

열아홉째, 정부는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음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홍보 중심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2020년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인도적 위기 등 글로벌 복합적 위기 발생의 환경 가운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을 설정하기 위해 보다 본격적인 노력을 해야 함. 또한 향후 한국이 제공할 ODA의 자원 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할 10~30대에 주목해야 함. 이를 위해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주목해야 함. 또한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함. 이 같은 작업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더욱 협력해야 하며,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야 함.

8) <https://unctad.org/news/development-aid-hits-record-high-falls-developing-countries> (검색일: 2024년 12월 2일)